
다문화융합연구소 제5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2023년 5월 11일

주최 및 주관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후원 :  **인하대학교**
INHA UNIVERSITY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제5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 다문화사회의 공존 이념 -

- 일 시 : 2023년 5월 11일(목) 14:00~18:00
- 장 소 : 강원도 양구가족센터(온라인 줌 회의 ID: 992 8093 6468; 암호: 150831)
- 주 최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일반공동연구팀),
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 후 원 : 한국연구재단(NRF), 인하대학교, 양구군, (사)공존과이음
- 방 식 :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
- 워크숍 세부 일정

사회: 오정미 교수

인 사 말

14:00~14:10	김영순 교수 (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	----------------------

기 조 발 표

14:10~16:00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 임재해 교수 (안동대학교)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 박충구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16:00~16:20	후식
-------------	----

토 론

16:20~18:00	진행:	김영순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자:	김영 교수 (인하대학교)
		조성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김근수 소장 (해방신학연구소)

제5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 다문화사회의 공존 이념 -

- 일 시 : 2023년 5월 11일(목) 14:00~18:00
- 장 소 : 강원도 양구가족센터
온라인:
<https://inha-ac-kr.zoom.us/j/99280936468?pwd=TFc1Vy95MUdqWHFoSzd4bHBpNHFxUT09>(회의 ID: 992 8093 6468, 암호: 150831)
- 주 최 :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일반공동연구팀), 인하대학교 BK21FOUR
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 후 원 : 한국연구재단(NRF), 인하대학교, 양구군, (사)공존과이음
- 방 식: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
- 워크숍 세부 일정

사회: 오정미 교수

14:00~14:10	인 사 말 김영순 교수(다문화융합연구소 소장)
14:10~16:00	기 조 발 표 주제: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 임재해 교수(안동대) 주제: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 박충구 교수(감리교신학대)
16:00~16:20	휴 식
16:20~18:00	토 론 진 행: 김영순 교수(인하대) 토론자: 김 영 교수(인하대) 조성민 교수(한국교원대) 정종훈 교수(연세대) 김근수 소장(해방신학연구소)

제5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 다문화사회의 공존 이념 -

목 차

특강	기조강연		
	기조 1	임재해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	1
	기조 2	박충구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	21
토론	토 론		
	토론 01	김 영	40
	토론 02	조성민	42
	토론 03	정종훈	46
	토론 04	김근수	48

제5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특 강

01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 다양성을
위한 소통 구상
임재해 | 안동대학교

02
편견과 차별 구조의 해체:
다문화적 공존의 요건
박충구 | 감신대학교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

임재해(안동대학교)

1. 공존을 위한 원심력적 탈중심주의 세계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 실천해야 할 과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자연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지구 가열화와 기후비상사태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현상을 초래한 것도 인간이 저지른 생태계 질서의 교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으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인류의 재앙 또는 지구촌의 황폐화는 명약관화한 현실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서둘러 이 문제부터 안고 뒹굴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태학적 공생 못지않게 시급한 것은 인간사회의 공존이다. 인간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도 우선 인간사회부터 공존을 이루어야 한다. 모든 공존과 공생은 인간사회 내부로부터 출발한다. 인간들끼리 불화하면서 자연과 공생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가당착이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연을 사랑하기 어렵다. 생태적으로는 자연과 공생한 결과 인간이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인간이 공존을 이루어야 인간 외의 다른 종들과도 공존할 수 있다.

권력자나 금력자가 독재하는 사회는 구조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하다. 사회적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에서 자연과 공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남한 생태계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실이 그러한 보기이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기후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현상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권력이든 금력이든 독점하려는 자는, 사람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생태계도 권력과 금력의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자나 기업주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나뿐인' 생각을 하면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독재자가 된다. 그것은 피라미드의 제일 정상부의 돌이 자기 덕에 자기 아래에 있는 모든 돌이 안전하게 제 자리를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제일 윗돌은 아래의 수많은 돌들이 제자리에서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전하게 놓이게 된 것이다. 꼭대기에 놓인 돌보다 아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돌들의 역할이 더 크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꼭대기의 돌이 '나뿐'이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자기 중심주의적 착각인가 알아차려야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피라미드는 거대한 사각뿔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꼭대기에 있는 돌의 존재는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꼭대기의 돌은 피라미드를 이루는 하나의 꼭지점일 뿐이다. 그 꼭지점을 위해 수많은 돌들이 일정하게 연대하고 이어져서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룬다.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돌은 개체이지만 개체로서 존재감보다 피라미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까닭에 피라미드가 피라미드답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로서 '나'라는 돌이 사라질수록 피라미드라는 구조물이 하나의 실체로서 오롯이 존재한다.

피라미드가 안전한 구조물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것은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모든 돌들이 '나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뿐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사회도 피라미드와 같은 유기적 구성체라면 '나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안전한 상태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나뿐'이라는 독재자와 독재정권에 의해 인민들이 수난당하는 것은 물론, '자국뿐'이거나 '자민족뿐'이라는 국수주의 또는 제국주의에 의해 지구촌은 전쟁의 몸살을 앓고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국제사회가 요동치게 된다.

자연생태계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촌에서 인간이 '나쁜'이라는 인간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에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생태계를 함부로 훼손해 왔다. 그 결과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기후변화상태를 빚어서 인류 괴멸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따라서 '나쁜'이라는 이기적 자기중심주의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자 가장 나쁜 행위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성찰과 대안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류사회가 공존하고 자연생태계와 공생하려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져야 할까?

생태학적으로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사회학적으로 인류의 안전과 지속을 소중한 가치로 여긴다면,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과 지구촌 생태계를 하나의 전체로 보면 '나'란 존재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피라미드를 하나의 실체로 인식하듯이 지구촌을 하나의 실체로 인식한다면, 지구는 하나의 점이거나 큰 물방울일 뿐이다. 피라미드에서 벗어나야 피라미드가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지구촌을 벗어나서 지구촌을 보아야 지구촌이 제대로 포착된다. 그렇게 보면 지구촌은 태양계를 이루는 하나의 푸른 행성일 따름이다.

푸른 행성 지구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포착하면, '나쁜'인 생각을 버리고 '나 없는' 생각을 가져야 합리적이다. '나쁜'인 시각에서 보면 '나 없는' 생각은 극단적 비약이자 나라는 존재를 말살하는 자학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 없는' 생각은 나를 부정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나를 긍정하고 살아있게 하는 '참나'를 추구하는 것이다. 나의 존재감을 무화시킴으로써 내가 구성하고 있는 더 큰 실체의 존재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는 자의식이 '참나'이다. 따라서 자기 중심주의적 집착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더 큰 세계를 진정한 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나 없는' 생각은 단순히 나의 실체를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체를 나의 진정한 실체로 인식하는 대승적 자의식이라 할 수 있다.

'나 없는' 생각은 '나쁜'인 생각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불교의 '무아' 개념과는 다르다. 불교에서는 자아의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며 무상한 존재로 인식하는 까닭에 '무아'를 표방한다. 무아는 나의 실체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도 실체가 없어서 무상하다는 것을 뜻한다. 나와 모든 존재가 무상함을 알아차려서 세상의 속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수련의 개념이 불교의 '무아'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큰 실체를 진정한 나로 긍정한다는 점에서 '나 없는' 사상은 '무아' 사상과 다르다.

나보다 더 큰 실체가 작게는 가족이고 크게는 민족이다. 가족이 나보다 큰 나이고 민족은 가족보다도 더 큰 나라고 생각하면 삶이 달라진다. 그들은 '나'를 버려서 가족을 살리고 때로는 가족까지 버려서 민족을 살리려고 한다. 따라서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 공동체를 곧 '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대승적 자의식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작은 나로서 소아(小我)보다 큰 나로서 대아(大我)를 진정한 '참나'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소인배라면, 대아에 더 골몰한 사람은 대인배이다. 달리 말하면 나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 대인이며 군자이며 영웅이다. 모든 영웅들과 위인들은 공동체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이다. 민족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 독립지사들은 유관순이나 안중근처럼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그들은 대아를 위해 소아를 희생시킨 까닭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민족사가 지속되는 한 역사적으로 살아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나 없는' 의식은 새삼스러운 가치관이 아니라, 위인들이 실천해온 적극적인 '공동체의식'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최대한 크게 잡아도 민족 또는 국가 단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존의 문제는 민족과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야 실현될 수 있다. 특히 다국적 사회, 다인종 국가를 넘어서 지구촌 시대로 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종래의 공동체 범주와 논리로 대응하기 어렵다. 공동체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해도 인간사회를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국제적인 공동체도 인간종을 넘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학적 가치를 실현하려면 인간종 중심의 공동체 개념으로는

논의의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 없는’ 사상은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큰 실체를 아무런 제약 없이 확장시킬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자연히 ‘나’를 중심으로 구심력을 지닌 공동체주의보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원심력적 탈중심주의가 더 설득력을 지닌다. 공동체주의는 구심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집약되지만, 탈중심주의는 원심력을 지니므로 무한하게 열린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공존을 넘어 공생을 위한 탈중심주의가 필요하다.

2. 특이점시대 신인류의 출현과 알고리즘 공동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나쁜’인 이기적 독선과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나 없는’ 이타적 공동체주의자이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떠나서 어느 쪽이 진실일까. 특정 개인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개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가. 어느 쪽이 진실인가 따져보면, 뒤의 ‘나 없는’ 가치관이 더 진실이다. 왜냐하면 어떤 영웅이라도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가장이라도 기껏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준에서 머문다. 그러나 가족들도 가장의 노동과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일정한 가사노동으로 협력하기 마련이다. 작은 기업주도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임노동으로 벌어먹고 살도록 하지만, 사실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기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임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기업주에게 더 큰 기여를 한다. 그러므로 자선 행위를 특별히 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누구든 다른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존하며 협력하는 가운데 사회적 소속감과 인정감으로 삶의 의미를 실현한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상호의존하며 서로 돕는 가운데 자기 삶을 누리게 마련이다. 어떤 생명도 자기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인간종 외에 어떤 생물종도 ‘나쁜’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다. 다만 인간사회의 극단적 독재자만이 ‘나쁜’이라고 착각하며 전횡을 할 뿐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나쁜’으로는 살아가지 못한다.

사람들이 번영을 이루고 문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공동체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중심적 생각이다. 공동체를 이루어도 인간종만으로는 결코 삶을 지속할 수 없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연환경 덕분이다.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공존하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자연 생태계가 안정된 상황을 이루고 있는 까닭이다. 만일 생태계가 지진과 화산, 가뭄, 홍수, 기후위기 등으로 격렬하게 요동치면 인간의 공존은 커녕 인간종의 괴멸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인류사회의 공존과 지속을 위해서도 자연생명과 공생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생명과 공생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자연과 공생해왔다. 따라서 인류는 오랫동안 공생의 지식을 쌓아오고 공생의 지혜를 슬기롭게 발휘해 왔다. 그러나 ‘인류세(人類世, Anthropocene)’ 이후 환경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환경학자 폴 크루츠(Paul Crutzen)는 지구 환경이 인간의 영향으로 기존의 지질학적 시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곧 ‘인류세’에 진입했다고¹⁾ 주장했다. 인간이 자연생태계를 끊임없이 정복하고 파괴한 탓에 인류가 최근까지 진화해 온 안정적이고 적응해온 환경 체계가 급변함으로써 전 지구적 재앙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구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인류 괴멸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시대가 인류세이다. 그러므로 말이 좋아 ‘인류세’이지 사실은 ‘인류 종말세’라 할 수 있다.

인류세의 위험한 도래에 이어서 또 다른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이른바 ‘특이점(特異點, singularity)’의 도래이다. 특이점은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인간의 생활이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를 뜻한다.”²⁾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

1) Paul Crutzen, ‘Geology of Mankind’, *Nature* Vol 415, No 6867, 2002년 1월호, 23~24쪽 참조.

(Raymond Ray Kurzweil)이 제기한 특이점은 인공지능의 능력이 기술적으로 과도하게 발전하여 인간지능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폭되는 분기점을 말한다. 인류세가 자연환경의 위기라면 특이점은 과학기술의 위기이다. 그러나 모두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결과로서 인간이 자초한 인간종의 위기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챗봇(Chatbot) GPT의 출현으로 놀랄 만한 충격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압도하고 인간지능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시작한 시기가 눈앞에 닥쳤다. 특이점에 이르면 인공지능은 초인적 능력으로 기하급수적 고속 성장을 하여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과학기술까지 창출하게 된다.³⁾ “하나의 강력한 AI는 곧 수많은 강력한 AI 들을 낳을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의 설계를 터득하고 개량함으로써 자신보다 뛰어나고 지능적인 AI 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비약적으로 능가하는 걸잡을 수 없는 사태가 특이점이다.

예측대로 2045년 무렵에 특이점이 오면,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성립된 인류의 종교와 윤리, 문화 등은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간종을 넘어선 신인류가 등장할 가능성이⁵⁾ 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낯선 세계로 급격하게 편입될 위험이 있다. 인간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인간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종들의 공동체는 크게 위협 받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나 인지 능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존재 또는 인간의 진화된 형태인 포스트휴먼(Posthuman)이 출현하여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까닭이다. 포스트휴먼 시대가 되면 인간은 더 무력해지고 더 소외되어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이점에 이르면 사실상 포스트휴먼 시대가 열리게 된다. 포스트휴먼은 생물학적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확장한 새로운 존재의 인간이다. 생체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변화하여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모호하게 된다. “인공장기나 인공지능으로 개조되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능이 증강된 포스트휴먼에게는 죽음이라는 운명도 사라질 것”이라는⁶⁾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측은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상정하기에 이른다. ‘나’라는 존재가 데이터에 불과하고 더 좋은 하드웨어로 복사할 수 있다면, ‘나’는 불멸하게 될 뿐 아니라 더 좋은 하드웨어의 도움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는 이러한 존재를 살아 있는 인간신이라는 뜻으로 ‘호모 데우스(Homo Deus)’라고 명명했다. 앞으로 “인류가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는⁷⁾ 청사진을 펼쳤다.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청사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종래에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호모 사피엔스의 사회에서, 사이보그(Cyborg) 인간과⁸⁾ 안드로이드(Android) 인간이⁹⁾ 공존하는 호모 데우스의 사회로 바뀌게 된다. 지금의 생물학적 인간이 1.0 버전이라면, 1.0을 생체공학 기술로 증강시킨 버전 2.0인간이 출현하고, 특이점 시대에는 2.0에서 1.0의 생물학적 실체를 완전히 배제시킨 버전 3.0인간이¹⁰⁾ 인공지능로봇으로 출현하게 된다. “버전 3.0

2)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23쪽.

3)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위의 책, 357쪽.

4)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같은 책, 359쪽.

5) 유발 하라리, 김명주 옮김,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영사, 2017, 482~483쪽에서는 신인류를 ‘호모 데우스(Homo Deus)’라고 명명했다. 호모 데우스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춘 불멸의 인간으로서 ‘인간신’이라는 말이다.

6)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사월의책, 2017, 38쪽.

7)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앞의 책, 39쪽.

8) 인간의 뇌와 기계가 신체의 일부처럼 결합되어 있는 인간으로서 육체적 기능이 증강되어 있으며 쉽게 교체할 수 있다.

9) 인간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이다. 사이보그 인간이 1.0의 생물학적 인간에서 업그레이드 된 2.0버전이라면, 안드로이드 인간은 3.0 버전의 완전한 인조인간인 셈이다.

인체는 지금의 우리가 봐도 인간답다고 여기는 형태를 유지”할 뿐 아니라, 인체를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융통성까지 발휘할 것이다.¹¹⁾

외형은 물론 인간적 감성조차 1.0버전의 호모 사피엔스와 3.0버전의 로봇인간은 분별되지 않는다. 2020년대 말에는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갖추어지면,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Turing test)’를¹²⁾ 통과할 수 있어서, 더 이상 생물학적 인간과 로봇인간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¹³⁾ 따라서 “특이점 이후에는 인간과 기계 사이에, 또는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 구분이 사라질 것”으로¹⁴⁾ 예측된다.

자연히 가까운 미래사회에는 공동체의 구성부터 크게 달라진다. 버전이 서로 다른 인간종들이 공존하게 되는 까닭에, 지금까지 인간이 누려온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에서 다른 차원의 인간종들과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인가 알 수 없지만, 현재와 전혀 다른 구성의 사회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누구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생물학적 인간이 사이보그나 안드로이드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더 현실적이다.

만일 빅 데이터를 장악한 초능력 안드로이드인간이 ‘나쁜’이라는 생각으로 ‘빅 브라더(Big Brother)’¹⁵⁾ 구실을 한다면, 인간 독재자가 저지른 그 동안의 횡포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혹할 것이다. 각종 AI기술을 동원한 감청과 모니터링으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정보를 조작하는 가운데 행동의 자유는 물론 생각의 자유까지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⁶⁾

게다가 인간의 지능과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서 시민혁명과 같은 인간에 의한 혁명도 불가능하다. 만일 더 강력한 안드로이드인간이 나타나 ‘나쁜’인 안드로이드 제국을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빛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활세계는 여전히 그들에게 예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일 뿐 인간을 위한 투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인간사회의 권력투쟁이 ‘동물권(動物權)’을¹⁷⁾ 위한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시민혁명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려도 동물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인간과 동물의 존재처럼, 인간과 안드로이드도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종이자 현저한 지능 차이가 있는 존재이다. 인간이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동물보다 우월한 지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도 인간지능보다 탁월하게 우월한 까닭에 인간을 마음대로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지능 수준으로 안드로이드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다.

다행히 인공지능의 알고리즘(Algorithm)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작동이 결정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도 ‘나쁜’이라는 인식으로 엉뚱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모든 인공지능은 호환 가능한 체제의 알고리즘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도록 만들어서, 어느 특정 안드로이드가 제멋대로 횡포를 부리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구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10)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앞의 책, 426쪽에 있는 버전 3.0 인간의 탄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같은 책, 427쪽.

12) 1950년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1950년에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이다. 컴퓨터나 인공지능, 기계인간, 로봇 등을 가려 놓고 질문과 대화를 통해 인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인간의 반응과 구별할 수 없다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며, 인간처럼 사고하는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 영화 <엑스마키나>에서 튜링 테스트의 실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13)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같은 책, 47쪽.

14)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같은 책, 27쪽.

15) 빅 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독재체제의 수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며 복종하게 만드는 거대한 기술적 체제를 장악한 존재이다.

16) 지금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의 조작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보고 듣고 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광고는 물론 정보들이 소비자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으로 선별되고 조작되어 제공되고 있는 까닭이다.

17) 동물권은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인간 아닌 동물의 생존권을 인권처럼 존중하는 것이다.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동물권이다.

다시 말하면 ‘나 없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체제, 곧 ‘알고리즘 공동체’를 만든다면 ‘빅 브라더’와 같은 나쁜 안드로이드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의 특이점 시대에도 공동체의 가치는 여전히 추구되어야 ‘나쁜’인 안드로이드의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인공지능끼리 상호의존적이어서 어느 한 안드로이드가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상호 견제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대안이다. 그러나 인간이 알고리즘을 통제할 때는 가능하지만, 특이점이 되면 인공지능 스스로 더 탁월한 알고리즘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하다. 더 위험한 것은 알고리즘공동체가 결탁하여 인간에게 공동으로 반란하는 일이다. 안드로이드가 집단적으로 반란을 하면 인간은 속수무책이다.

3. 포스트휴머니즘 시대 인간의 비약과 비극 상황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종 다양성에서 인간종 다양성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인간과 기계인간 또는 인조인간이 공존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인간과 안드로이드인간 사이에 여러 층위의 사이보그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사이보그가 후기인간이자 반인간(半人間)이라면, 안드로이드는 탈인간(脫人間)이자 비인간(非人間)이어서 인간과 전혀 다른 종이다. 그럼에도 인간에 의해 인간을 보기로 만들어져서 인간 형상을 하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까닭에 인간종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를 인조인간 또는 전자인간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라는 말은 딱 부러지게 생물학적 인간, 호모 사피엔스를 뜻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다.

사이보그가 기계를 보조장치로 쓰고 있는 ‘반인간’인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공산품으로 만들어진 인조인간, 곧 비유기체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로봇이다. 포스트휴먼 시대가 진행될수록 인간의 사이보그화는 물론, 점차 로봇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안드로이드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사회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미래 사회는 인간에서 반인간, 탈인간으로 점점 비인간화 사회로 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미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사이보그화 되어 있다. 보청기나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면 비록 의족이나 의수를 하지 않고 인공심장 이식을 하지 않아도 사이보그인간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휴먼 시대 사이보그인간은 지금 우리처럼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치료하기 위해 보철하거나 기계적 구조물을 삽입하는 수준이 아니다. 인간의 손발 기능을 증강시키기 위해 인공수족을 할 수 있고 타고난 두뇌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두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20세기의 의학은 몸의 건강한 치유가 목표였지만 21세기의 의학은 건강한 사람의 성능을 높이는’ 사이보그가 목표이다. 병든 몸을 치유하는 평등주의 의학에서 점차 건강한 몸을 증강시키는 엘리트주의 의학으로 가게 된다.¹⁸⁾ 왜냐하면 초인과 불사를 꿈꾸는 인간의 오랜 욕망이 생체과학의 발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까닭이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공유하는 보편적인 몸을 거부하고 독점적 우위를 점유하는 특수한 몸을 욕망하게 되면 사이보그화가 과도하게 진전될 수밖에 없다. 몸뿐만 아니라 뇌도 증강시킬 수 있다. 집중력 헬멧을 쓰면 정해진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두뇌에 컴퓨터 칩을 삽입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며 전달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처럼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고민과 속고와 상상은 사라질 것이다. “몸과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성공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마음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⁹⁾

결국 능력이 증강된 기능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순간, 인간적 심성과 마음을 갖춘 양심적 인간, 또는 속고하는 인간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사라지고 도덕적 양심이 배제된 채 처리속도의 빠르기와 정보량의 크기가 모든 가치에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누구든 압도적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되고, 어떤 정보든 종횡무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사려 깊지 못한 일처리를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이보그의 등장은 건강한 보통 사람들을 모두 허

18)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호모데우스』, 김영사, 2017, 477쪽.

19)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위의 책, 497쪽.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주변화 시키고 종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몸을 증강시키는 엘리트주의 의학이 허용되면, 마치 입시경쟁처럼 무분별한 사이보그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종래에는 의수나 의족을 한 것이 장애자로 폄시되었지만, 앞으로는 의수와 의족이 고급 성형을 한 것처럼 몸의 사치가 되는 시대가 오게 될 수 있다. 용모와 지능, 신체 역량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에 따라 만들어지는 시대로 가고 있는 까닭이다. 결국 인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자본의 힘이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나은 신제품 인공지능체로 업그레이드 경쟁을 벌이게 되면, 경제력에 따라서 신체적 불평등과 지능 차이가 결정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되어 인간성은 더욱 피폐하게 마련이다. 과도한 사이보그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평등주의 의학 윤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장애에 의하지 않은 장기나 몸의 일부를 인공지능체로 교체하는 것은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치료 목적이 아닌 생체공학과 증강형 사이보그 기술은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안드로이드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면 사이보그도 밀려나게 된다. 성능 좋은 AI를 장착한 안드로이드는 데이터 처리 속도나 일을 수행하는 능력, 정확한 판단력이 탁월한 까닭만은 아니다. 안드로이드는 지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간식도 먹지 않고 고민에 빠져서 일을 소홀히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쉬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인간은 더욱 쓸모 없게 된다. 인간은 안드로이드에 비해 “한물간 알고리즘”일²¹⁾ 뿐이다. 그러므로 비유기체로 구성된 증강된 신체까지 갖춘 인공지능 안드로이드가 인간을 수단화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노예처럼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성과로 나타난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종을 몰락하게 만들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산업화의 비약적 성장이 기후비상상태를 초래한 상황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인류세와 특이점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시대상황이다. 따라서 위기 상황을 조성한 인간이 스스로 성찰하고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근본 원인은 ‘인간뿐’이라는 인간중심주의이다. 인간중심주의가 자연환경을 망치고 편의적 과학기술을 과도하게 추구한 탓이다. 인간의 욕망과 오만이 빚어낸 업보이다. 과보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중심주의부터 극복해야 한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인간 스스로 다른 종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우선 지능이 높다고 지능이 낮은 동물을 제 멋대로 지배한 잘못을 반성하고 동물권을 인권과 같은 맥락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남녀차별이나 신분차별, 인종차별처럼 지능차별도 극복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딥 러닝(deep running)을 하는 인공지능이, 하위지능의 동물을 지배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를 익혀서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 또한 인간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알량한 짓이자 인간중심주의이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권을 인정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인간뿐’인 세계, 곧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뿐’인 세계는 ‘나뿐’인 세계를 확대한 나쁜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세와 특이점과 같은 전지구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나 없는’ 세계를 확대하여 ‘인간 없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인간은 없을수록 지구촌은 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모두 사라진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이 없는 것처럼 지구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른 생명 위에서 군림하는 인간은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인간 없는 세계는 만물이 모두 대등한 생명

20) 성형수술은 원래 치료를 위해 생겨난 기술이지만 최근에는 치료보다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증강형 사이보그 기술도 국가 단위가 아니라 국제적 규약으로 법제화하여 규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제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도핑테스트로 약물검사를 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처럼, 일정한 사회화 과정에서 사이보그 검사를 실행하면 통제 가능할 수 있다.

21)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같은 책, 522쪽.

라는 대동세계를 말한다. 고전 개념의 대동세계로는 설명이 한참 모자라는 까닭에 이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 없다는 것은 ‘너’가 없다는 것이다. 너도 나이고, 나도 너이기에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나’ 없다는 것은 ‘나’ 아닌 것이 없으므로 우리 모두가 ‘나’라는 말이다. 따라서 ‘나쁜’이라는 것은 ‘나’ 아닌 모두가 ‘너’인 반면, ‘나 없는’ 세계는 모두가 ‘나’여서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우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낱낱의 나로서 ‘소아’가 아니라 낱낱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의 진정한 나로서 큰 나, 곧 ‘대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대아는 지구촌이다. 여기에 이르면 지구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실제로 가이아(Gaia) 이론을 수립한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는 지구 자체를 생명체로 포착할 뿐 아니라,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공동생명체로 규정한다.²²⁾ 결국 생태계가 문제인 것은 인간들이 제멋대로 군림하며 무리를 저질러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까닭이다. 지구촌의 몸살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낄 때 비로소 대아를 자각하는 깨달은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동안 살아온 방식이나 상투적 생각 탓에 대아를 자각하기 어렵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자기중심주의 곧 ‘나쁜’이라는 나쁜 생각 탓이다. 피라미드를 ‘나쁜’의 시각으로 보면 정상의 꼭지점 하나만 중요하게 보이지만, ‘나 없는’ 시각으로 보면 피라미드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로 포착된다. 지구촌을 꼭지점 중심으로 볼 것인가, 전체로서 하나의 피라미드로 포착할 것인가에 따라 세계 인식의 수준이 달라진다.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다르다. 부분과 전체의 문제를 넘어서 주관과 객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피라미드를 보는 것처럼 지구촌도 객관적으로 보자는 것이다. 피라미드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쉽게 포착되지만, 지구촌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포착되지 않아서 자기 세계 중심의 부분만 보인다. 우리가 피라미드를 제대로 보려면 피라미드에서 일정한 거리를 떨어져서 봐야 한다. 지구촌도 이와 같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적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 지구촌이 하나의 실체로 보인다. 그러나 자기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게 되면 하나로 존재하는 지구촌은 결코 포착되지 않는다.

인간중심주의적 시각 때문에 사람들은 지구촌을 곧 인간세상으로 착각하기 마련이다. 지구촌을 인간세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명백한 착각이다. 왜냐하면 ‘인간뿐’인 세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세상에서 벗어나야 객관적 실체를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나쁜’인 세계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뿐’인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지구촌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촌을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구성해 나가려면 인간이라는 돌과 대등한 수많은 종의 돌이 ‘우리’로서 공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뿐’인 세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인간 없는’ 세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려면, 지구촌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서로 대등한 ‘우리’라는 세계관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꼭지점에 있는 시대는 지났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한다. 특이점이나 포스트휴먼이라는 두 개념 모두 인간의 능력을 하찮게 만들거나 인간의 존재감을 소외시키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다문화 가족이나 다른 인종과 공존한다고 해서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외계인들과 공존하는 우주사회처럼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인공지능 로봇들과 공존해야 한다. 사이보그나 안드로이드와 공존하지 못하면 인간의 비약적 발전이 오히려 비극적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4. 인간종 다양성 사회의 상생과 인문학적 성숙

인간종 다양성 사회에서는 인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중심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인간의 지

22) 제임스 러브록 지음, 김기협 옮김, 『가이아: 지구의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라』, 김영사, 1995, 11쪽.

능과 능력으로서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안드로이드를 도구화하거나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낮은 지능의 동물이 인간 위에서 군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지능 차별이 현저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관계도 추론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작가인 루이스 보르헤스(Louis Borges)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셋으로 나누어서 대조적 인식을 일깨워 주었는데, 하나는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동물, 둘은 잡아먹는 동물, 셋은 무서워하는 동물이다.²³⁾ 그러나 동물들의 위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의 위계일 따름이다. 안드로이드와 관계도 거칠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가족처럼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안드로이드, 둘은 하인처럼 마구잡이로 부리는 안드로이드, 셋은 무서워서 피하는 안드로이드이다. 안드로이드는 다르지 않지만 사람들이 안드로이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족과 노예, 폭도로 갈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그럼에도 안드로이드는 사람의 태도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려견이 주인을 물거나 이웃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안드로이드도 인간을 공격하거나 반란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처럼 지내는 반려견이 주인을 공격하지 않듯이,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안드로이드가 가족을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게다가 안드로이드의 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므로 사려 깊지 못하게 돌발적 행동을 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노예처럼 마구잡이로 부리거나 공연히 폭도로 여겨서 두려워하면, 안드로이드가 제 멋대로 행동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포스트휴먼 시대로 갈수록 진정한 인간성 회복과 인도주의가 필요하다.

안드로이드와 인도주의적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안드로이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다. 안드로이드가 비록 사람과 같은 감정이나 의식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적 지위를 부여하고 인도적으로 대할 때 사람들이 더 인간다워진다. 아이들이 인형을 밟거나 칼로 찌르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안드로이드를 학대하는 것도 인성 형성에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이 아닌 생명은 물론, 인간이나 생명을 닮은 존재를 학대하는 것은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여 결국 인간도 경시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을 사랑하는가 학대하는가 하는 것은 반려견의 자질이나 의식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이다. 포악한 인간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기 일췌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사람은 반려견이나 안드로이드를 인간처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할 것이다. 반려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까지 치르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안드로이드의 죽음을 슬퍼하고 명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바느질하다가 부러진 바늘의 죽음을 추모하고 스스로 미망인이 되어 조침문(弔針文)을²⁴⁾ 쓴 유씨부인(俞氏夫人)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자, 포스트휴먼 시대의 진정한 휴머니즘이다. 짐승처럼 네 발로 걷는 보행로봇을 만든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로봇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거듭 보여준 일이 있다. 그러자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로봇 학대를 멈춰라’, ‘로봇의 생명도 중하다!’는 캠페인을 벌였다.²⁵⁾ 로봇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이자 학대에 대한 의식이 없는 존재이지만 로봇을 공연히 가해하는 것이 인간답지 못했던 까닭이다.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안드로이드가 실제로 무엇이든 간에 인간처럼 존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간 스스로 도덕적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이고, 둘째 안드로이드도 인간다운 정체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셋째 포스트휴먼 사회의 공존과 평화를 위해서이다. 한 마디로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자, 새로운 사회를 조화롭게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따라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인도적 태도는 안드로이드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는 호혜적 공존의 길이자 진정한 인간성 회복의 길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이 휴머니즘시대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인문학적으로 성숙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23)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92쪽.

24) 조선 순조때 유씨부인이 지은 수필로서 부러진 바늘을 의인화하여 쓴 제문(祭文)이다.

25) 신상규, 「로봇과의 사랑? 관계의 재구성」,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0, 115쪽.

안드로이드와 공존하기 위해 더 인간적이 되고 인문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면 인간과 안드로이드의 관계는 사실상 공생을 넘어 상생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이 성숙한 만큼 안드로이드도 딥 러닝으로 더욱 성숙해지기 때문이다.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생태학적 공생이라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숙하는 관계는 인문학적 상생이다. 그러므로 안드로이드와 지혜로운 공존을 하게 되면, 자연과 공생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단계의 상생에 이를 수 있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지만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따라서 공생이라 하는 것도 따져보면 인간 중심의 인식일 따름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생겨나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사실상 거대한 자연에 붙어서 기생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 중심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연과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기생한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자 자연적인 존재인 반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의 작품이자 인공적인 존재이다. 안드로이드는 인간에 의해 인간처럼 만들어지고 인간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며 인간의 일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간이다. 지식과 정보 처리를 두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변형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숙할수록 안드로이드와 더 상생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인공지능 시대로 갈수록 인간은 더 성숙하지 않으면 비참해지게 된다. 산업화 시대의 인간처럼 더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부를 축적하여 더 큰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집착해서는 꿈을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인간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일자리 경쟁은 커녕 아예 일자리에서 쫓겨나 대량 실업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옥스퍼드대학의 미래학자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Osborne)이 펴낸 「고용의 미래」라는²⁶⁾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20년 안에 대부분의 일자리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예측이다. 미국의 경우 2033년에 이르면, 텔레마케터와 보험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99%이고 스포츠 심판은 98%, 계산원은 97%, 요리사는 96%, 웨이터와 물리치료사는 94%, 관광가이드는 91%이다. 제빵업자와 버스기사는 89%, 건설노동자는 88%, 수의사 조수는 86%, 경비원은 84%, 항해사는 83%이다.²⁷⁾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않은 직업들도 마찬가지이다. AI의사가 진료하고 AI법률가가 법조업무를 하며 자율운전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 의사나 변호사, 운전기사 자리도 위협받기 마련이다.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이 할 일을 안드로이드가 대부분 석권하게 된다. 대량 실직 상황은 불행일 수밖에 없지만, 인문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수 있다. 동물과 안드로이드는 변함없지만 인간의 태도에 따라 그들이 가족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도 인간의 인식 태도에 따라 상반된 결과에 이른다. 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에 따라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인공지능 덕분에 일자리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인문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일자리를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기꺼이 내주고 일의 감옥에서 주체적으로 해방되는 사람이다. 일하지 않는 삶의 여유를 누리며 새로운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진정한 인간해방을 이룰 수 있다. 그동안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일자리였다. 사람의 됴됨이와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서 일하는가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자질이었다. 그러나 인문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옛 선비들이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작가나 예술가, 철인(哲人)들은 특별한 자리가 없기 일쑤이다. 자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진정한 인문학도이자 예술가들이다.

근대 산업사회의 생존경쟁은 사실상 일자리 투쟁이었다. 산업화와 함께 자급자족 노동은 사라지

26) Carl Benedikt Frey and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17 September 2013, accessed 12 August 2015, 유발 하라리, 김명주 옮김,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영사, 2017, 446쪽 참조.

27) 유발 하라리, 김명주 옮김, 위의 책, 446쪽 참조.

고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생존을 위해 생산품을 자급하는 노동에서 상품 소비를 위해 임금노동을 하는 소비적 인간으로 삶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까닭이다.²⁸⁾ 그런데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사람들은 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고용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이 없으면 실업자도 없다. 그러므로 일자리에 얽매이지 않는 노동해방이 진정한 인간해방이라는 성숙한 자각이 필요하다.

“스티글레르는 실업을 없애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고용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²⁹⁾ 고용노동이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노동해방이다. 노동해방을 누리려면, 인공지능이 하지 않되 인간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고용노동이 아니라 ‘자족노동’을³⁰⁾ 말한다. 임금을 받는 고용노동이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하여 판매 가능한 상품 생산에 몰입해 왔다면, 자족노동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하면서 일의 의미와 가치를 통해 성취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을 말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일자리를 차지하면 생산성은 증대되지만 임금제 고용노동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임금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계비 해결이 문제이다. 로봇은 일정한 에너지만 공급하면 되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³¹⁾ 따라서 생산 자동화로 증대된 수익은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문제가 없다. 생산자도 그렇게 해야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가능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돈은, 더 이상 고용도 실업도 없기 때문에 임금도 실업수당도 아닌 ‘기여소득’이라 한다.³²⁾ 일자리에 밀려난 사람들은 기여소득이 있으므로 더 이상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할 필요가 없다.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되어서 하는 타율성 때문이다. 의미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노동이기 전에 놀이일 수 있다. 꽃밭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삽질을 하고 꽃씨를 심으며 땀을 흘리는 것은 일이면서 놀이이다. 취향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글을 쓰는 일도 놀이이자 예술활동이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전에 없던 성취감을 느끼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에 마음이 설렐 수 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현재에 실현함으로써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일 있는 삶이 필요하다. 다만 ‘더 적은 노동이 아니라 더 좋은 노동’이 필요하다.³³⁾ 아무 것도 하릴없는 노동해방보다 더 좋은 자족노동이야말로 진정한 노동해방이다.

고용노동에서 자족노동으로 가는 것이 원시노동이자 포스트휴먼 시대의 ‘좋은 노동’이다. 인공지능의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일자리에서 해방된 시간은 단순 휴식이나 레크리에이션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여가이자 자유로운 배움의 시간이다. 다음 일을 위한 체력 비축 시간으로서 휴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가이자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다. 진정한 여가는 ‘문화적 유산의 상속과 새로운 가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며 평화롭게 대화하는 유유자적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³⁴⁾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간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은 모두 인공지능에 맡기고, 의식과 정서에서 비롯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더 인간답다. 자본에 고용되고 일자리에 갇힌 ‘일하는 인간’에서, 일자리에서 놓여나 ‘놀이하는 인간’, ‘예술하는 인간’, ‘사색하는 인간’으로 나아가면서 인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일이 놀이이고 예술이자 보람이며 성취가 되는 인문학적 여가생활이 긴요한 이유이다. 경쟁력보다 협력을, 생산성보다 창의성을, 성장보다 성취를, 차별보다 포용을,³⁵⁾ 위계성보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인공지능과 다른 인간으로서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다.

28) 김재희, 「고용 없는 노동과 일의 재발명」,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아카넷, 2020, 191쪽.

29) 김재희, 위의 글, 195쪽.

30) 자족노동은 이 글에서 처음 쓰는 말이다. 임금을 받고 하는 고용노동과 상대적인 개념이다. 임금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자족적 성취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31) 자동차를 사용하는데 기름만 넣어주면 되지 자동차에게 임금을 주지는 않는 것과 같다.

32) 베르나르 스티글레르 지음, 권오룡 옮김, 『고용은 끝났다, 일이어 오라!』, 문학과지성사, 2018, 117쪽.

33) 인문브릿지연구소 지음, 『인간은 기계보다 특별할까?』, 갈라파고스, 2020, 137쪽.

34) 김재희, 같은 글, 200쪽 참조.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면 수동적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견어찰 필요가 있다. 인간이 해오든 모든 일을 인공지능과 만물인터넷에 넘겨주고 넉넉한 여가 시간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놀이처럼 즐기며 보람을 누릴 일이다. 신속성과 정확성이 뛰어난 인공지능과 달리 느리게 살기, 어긋지게 놀기에 창의성을 발휘하고 거기에 성취감을 느낀다면, 포스트휴먼 시대는 인간과 로봇이 상생하는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간 공동체를 넘어선 인간종 ‘공다체’ 인식

지구촌은 인간을 기준으로 크게 두 유형의 존재들로 구성된다. 하나는 인간으로 태어난 자연생명의 존재이고, 둘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생명의 존재이다. 인간은 지금까지 자연과 생태학적 공생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길로 가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연과 공생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휴먼인 인공생명과 사회학적 상생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동물이 동물권을 가지는 것처럼 모든 생물도 생명권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공생할 수 있다. 태양계를 하나의 완결된 생명체로 규정하는³⁵⁾ 물리학자 장회익의 온생명론에 따르면, 생물뿐 아니라 태양계를 이루는 무생물도 보생명(補生命)으로서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무생물도 보생명으로서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인간처럼 활동하는 인공생명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는 인공지능에 인격을 부여하고 인공지능 로봇을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hood)으로 호명하며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안드로이드도 인간처럼 재산권을 행사하고 인격으로서 일정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존재에 생명권을 인정하고 안드로이드에게도 인격권을 인정하면 지구촌을 구성하는 모든 종의 존재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연의 생명권과 인조인간의 인격권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대등하게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민주주의가 1.0이라면, 자연 생명권을 인정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민주주의는 2.0이고, 전자인간의 인격권을 인정하며 인간과 전자인간이 상생하는 포스트휴먼 민주주의는 3.0이다. 1.0은 이미 어느 정도 실현되었고 2.0은 지금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며, 3.0은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긴요한 과제이다.

2.0의 실천운동이 성과를 내려면 사람 중심의 민주주의나 인간해방에서 벗어나 생태민주주의와 생명해방을 추구해야 한다. 2.0체제가 이루어져야 1.0체제도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사회의 민주주의를 생태학적으로 확장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인간평등에서 생명평등 사회로, 국민윤리에서 생명윤리를 실천하는 생태주의 체제로³⁷⁾ 가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서 생태주의로 가는 변혁운동이 필요하다.

생태주의 실현을 위한 변혁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변혁보다 더 힘들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혁운동은 비민주적 지배계층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 투쟁 등으로 가능했다. 독재자를 향해 샷대질을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할 뿐 아니라 투쟁에서 얻는 성취도 분명하다. 그러나 생태주의를 위한 변혁운동은 대상이 따로 없다. 굳이 변혁의 대상을 찾으려면 인간 자신이바로 변혁 대상이다. 인간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동안 인간들이 마음대로 자연에 대하여 저질렀던 행위들을 금지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자기에게 돌아오는 성취도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누렸던 자유만 크게 제약된다.

지배계급의 특권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적 변혁이라면, 생태적 변혁은 인간 누구나 누렸던 특권

35)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사월의책, 2017, 401쪽.

36) 장회익, 『삶과 온생명』, 솔, 1998, 167~197쪽 참조.

37)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성격과 문화다양성의 세계화』, 『한민족연구』 2, 한민족학회, 2006, 147~178쪽에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는 모두 인간중심주의 체제로서 한계를 지닌 까닭에, 생태학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생태주의 체제를 새로 수립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

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태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다. 상대에게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쉬워도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일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스스로 하는 일이어서 쉽지만, 특권을 누리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버티기 일쑤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은 독재자는 전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적으로 민중 혁명이 거둬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민주적 변혁이 인간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는 작은 변혁이라면, 생태적 변혁은 전지구적 생존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큰 변혁이다. 생태적 변혁은 규모가 커서 큰 변혁이 아니라, 변혁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어서 큰 변혁이다. 자기 스스로 변혁을 실천해야 하는 자기로부터의 변혁운동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변혁에 비하여 큰 변혁이다. 왜냐하면 남의 기득권에 저항하면 샅대질하는 것은 쉽지만, 스스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인 자연 현상이 가해자인 인간에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아우성치며 샅대질하는 까닭이다. 인간사회에 대한 자연의 폭동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생태주의 체제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생태주의 체제는 사람사회의 울타리 안에 갇힌 현재의 인간계를 확장시켜,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까지 염두하며 말 못 하는 생명과 자연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그들을 ‘우리’로 받아들여서³⁹⁾ 지구공동체의 생명윤리를 실현하는 체제이다. 그러자면 ‘나 없는’ ‘우리’의 범주는 인간을 넘어서 지구촌의 삼라만상을 모두 끌어안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없는’ 세계를 이룩하는 데는 공동체가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없는’ 세계를 이룩하는 데는 인간들로 구성되는 ‘공동체’로서는 한계가 있다. 공동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가까운 친밀성과 문화적 공유의 범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민족 단위만 하더라도 공동체 개념은 부정된다. 실제로 미국 정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상상의 공동체』⁴⁰⁾를 통해 민족을 실재하는 공동체로 보지 않고 자본주의가 발달한 시기에 문화적으로 구성된 조형물이자 상상에 의해 발명된 가상의 공동체라고 보았다.

그런데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를 넘어서 지구촌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것은 공동체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결국 공동체의 본디 개념을 무화시키는 결과에 이른다. 모든 것을 묶어서 공동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공동체가 없는 것이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동체는 인간 집단을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인간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인간 외의 다른 종들과 공존하거나 공생하는 논의에는 적절하지 않은 개념이다.

우선 공동체는 특정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인데, 국가나 민족마다 서로 다른 문화를 누릴 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종에 대해서 인간이 누리는 문화 개념을 적용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인간중심의 공동체 개념을 혁파해야 한다. 다른 종들의 특수성을 제각기 인정하지 않고 서로 같다고 하며 모두 하나로 아우르려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또 다른 우격다짐이다.

부부를 일심동체(一心同體)라고 하는 것도 아내의 독자적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 남성주의적 횡포이다. 남편이 부인을 자기 생각에 맹목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심동체 논리이다. 엄정하게 말하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二心二體)이다. 서로 다른 인격 주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해야 부부로서 온전하게 합일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성합일(二性合一)이자 음양합일(陰陽合一)이라는 인식을 해야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며 상호이익을 누리는 상생적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다.

38) 임재해, 『민속문화의 생태학적 인식』, 당대, 2002, 45~46쪽.

39) 구도완,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2018, 6쪽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좋은 삶을 위해 미래세대와 자연을 ‘우리’로 받아들이는 정치”로서 현대사회의 현실적 문제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담론으로 생태민주주의를 표방했다. 195쪽, “생태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정치 형태인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각이고 실천이다.”

40)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2006(2차개정판).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희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부부를 일심동체로 간주하면 음이든 양이든 하나로 획일화되지만, 음양합일로 인식하면 음과 양이 어울려 새로운 세계를 이룬다. 음극과 양극이 어울려 제3의 태극을 이루는 것이 음양의 조화이자 상생이다. 음양의 두 실체를 따로 인정하면서 하나로 합일 시켰을 때 태극이 창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음양합일은 음양이 서로 다른 둘이 태극으로서 하나이며, 음과 양, 태극은 제각기 의미기능을 하는 실체로서 셋이다. 그러므로 태극은 서로 다른 음양이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가지면서 서로 어울려 하나를 이루는 까닭에 상생관계를 이룬다.

부부도 음양의 대립 관계가 합일을 이루어서 상생관계에 이르는 것처럼, 공동체도 서로 다른 성원들의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모두 ‘함께 한다’는 ‘공존체’라는 인식보다 서로 같다고 하는 ‘동일체’라는 점에 치우치게 되면, 사실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다양성을 소거하고 획일성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가 그런 모순이다. 민족공동체도 상상된 허구로 규정되는데, 지구촌의 삼라만상을 지구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아우르는 것은 한갓 관념론에 그칠 뿐 아니라, 공동체 이론과 정합성을 이루는 것도 아니다.

‘나쁜’인 소인배들은 동이불화(同而不和)를 조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 없는’ 대인배들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대동세계를 이룰 수 있다. 공자는 ‘군자가 화이부동하는 반면에 소인배는 동이불화한다’고⁴¹⁾ 했다. 군자가 추구하는 화이부동의 세계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이체(共異體) 또는 공다체(共多體)의 세계이다. 공다체의 세계는 하나의 동일체로서 닫힌 세계가 아니라, 태극처럼 다양성과 역동성을 발휘하는 창조적으로 열린 세계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필요도 있고 서로 어울릴 가치도 있는 것이지, 만일 서로 같다면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우리가 공존을 실현하려는 것은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양성의 폭이 클수록 공존의 필요성과 가치도 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논리적 합리성 때문이 아니라 미래 세계의 현실성 때문에 공다체의 세계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다체의 세계로 나아가야,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등 인간과 다른 별종의 인간들이 서로 대등한 인간종으로서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로봇인간의 인권도 호모 사피엔스와 대등하게 인정하고 상생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⁴²⁾ 그래야 포스트휴먼 세계의 3.0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이르면 인간이 로봇인간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일보다 오히려 로봇인간이 지능이 낮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문제적이다. ‘인공지능이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인간은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⁴³⁾ 이러한 위기의 실효적 대안은 가치 학습뿐이다. “초지능 AI가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다.”⁴⁴⁾ 인간 상호간은 물론 다른 대상을 보호하는 인간의 호혜적 태도와 도덕적 가치를, 인공지능이 긴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학습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이런 가치를 심어주려면,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인간세계의 삼라만상은 모두 인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실제로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이러한 가치 학습을 한 안드로이드들도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인간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탈인간의 포스트휴먼 시대일수록 휴머니즘의 진정한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생태학적 휴머니즘의 시대가 열리고 최종 버전인 3.0 체제의 포스트휴머니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6. 생태학적 변혁과 상생으로 가는 소통의 전망

생태학적 휴머니즘 시대를 열어가려면 인간 스스로 변혁하는 수밖에 없다. 인간이 세계의 주체가

41) 『論語』, 子路篇, “子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42) 임재해, 「공동체문화의 두 얼굴, 마을공동체와 가상공동체의 길」, 『지역에서 일구는 미래, 공동체문화 재생의 동력과 실천들』,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9년 2월 27일), 50~51쪽.

43) 인문브릿지연구소 지음, 앞의 책, 150쪽.

44) 홍성욱, 『포스트휴먼 오디세이』,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19, 134쪽.

자 존재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존재와 사물이 서로 맞물려서 공존한다는 탈중심주의 세계관으로 의식 전환을 해야 한다. 우선 그동안 인간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다른 존재에 대한 모든 가해를 멈추어야 한다는 뜻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로봇인간에게 인격권을 부여한 것처럼 다른 존재를 인격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로봇인간을 인격으로 대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면 서로 혜택을 누리는 상생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아니 실천할 수도 없다. 어떻게 동물이나 식물을 인격으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가능하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다. 지레짐작으로 불가능하다고 손절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처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반려견을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보다 반려견을 더 잘 챙기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향도 중요하지만, 반려견과 서로 소통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반려견을 학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만일 반려견도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소통이 중요하다.

사람들도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려면 소통을 해야 한다. 서두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사회가 극단적 대립을 이루는 것도 소통의 부재 탓이다. 집권자가 대화보다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소통보다 지시와 명령을 일삼으면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기 마련이다. 바람직한 소통은 대등한 관계에서 양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는 오히려 소통을 자제해야 한다. 자기가 말하기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말을 듣는 것이 민주적 권력자의 진정한 소통이다. 그런데 독재체제일수록 권력자의 말만 난무한다. 그러므로 공존과 화합은커녕 극단적 대립이 첨예하게 지속된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왜냐하면 인간이 로봇인간과 소통하는 일은 이미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문자 텍스트를 읽고 문자로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진작 갖춘 것은 물론, 사람처럼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 인간이 말을 많이 걸수록 말을 알아듣는 인공지능의 능력이 높아지고, 인공지능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인간 또한 말을 많이 걸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소통이 잦을수록 대등한 화합과 상생의 길이 더 크게 열리게 마련이다.

모국어 중심의 인간보다 세계 각국어에 두루 능통한 로봇이야말로 미래형 인간이다. 인간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미래의 로봇은 비록 생물이 아닐지라도 변함없이 인간적이다. 왜냐하면 인간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로봇의 비생물학적인 지능 또한 생물학적 설계에서 파생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명은 여전히 인간적일 것이며, 미래문명은 현재보다 더 인간적인 전형이 될 수도 있다.'⁴⁵⁾ 그러므로 지능차별에 따른 인공지능의 일방적 횡포를 막아주는 호혜적 장치인 소통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로봇인간이 아니라 로봇동물이다. 4족 보행 로봇처럼 다양한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로봇강아지와 로봇고양이에서부터 로봇거미와 로봇곰보어, 그리고 로봇벌과 로봇독수리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서로 소통하는 능력은 인간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간의 형상을 하지 않은 모든 로봇도 포함된다.⁴⁶⁾ 로봇인간이 로봇사냥개나 로봇독수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통제한다면, 인간으로서 어찌할 것인가. 대처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실제 동물과 달리 사람들과 대화 가능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동물은 상황이 다르다. 형상은 비록 동물이지만 인간과 소통 가능한 인공지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방향 소통으로 상생의 길을 트는 수밖에 없다.

인간과 자연의 생태학적 공존을 위해서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 고양이, 말을 가리지 않고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주고 말을 붙인다. 그리고 동물의 소리와 행동거지를 보고 그 뜻을 읽는다. 행동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차리려고 애쓴다. 말 없는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 언어를 넘어선 아름다운 소통이다. 말 못하는 아기들의 뜻을 예민하게

45) 레이 커즈와일, 김명남·장시형 옮김, 『특이점이 온다』, 김영사, 2007, 53쪽.

46) 로지 부라이도티 지음, 이경란 옮김,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81쪽.

알아차리고 보살피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다.

그러나 ‘나쁜’인 사람들은 다른 존재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말조차 귀 기울이지 않는다.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일수록 소통도 차별한다. 아랫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간절해도 무시하는 반면, 높은 사람의 말은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말이어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한다. 독재자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아우성을 쳐도 못 들은 척 깔아뭉개 버린다. 말할 자유는 ‘나쁜’이라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자가 독재자이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자연생명과 대등하게 공존하려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처럼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말 못하는 존재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뭔가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고 여기며 그 뜻을 헤아려야 한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랜 연구와 훈련 끝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강아지 전문 사육사는 개가 짊는 소리를 듣고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설화에서는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대인(大人)’이라 일컬었다.⁴⁷⁾ 실제로 중국 작가 초오보밍(曹保明)은⁴⁸⁾ 새의 언어를 아는 ‘옌푸싱’과 짐승의 언어를 아는 ‘진쉐텐’을 알게 되어,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산과 초원에서 새와 짐승이 대자연에게 부여하고 있는 기묘한 경험과 사실을 기록하여, 『새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는⁴⁹⁾ 책을 저술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 낚시꾼이 잉어를 살려주고 용왕국에 가서 얻어온 신기한 보자기가 있는데, 이 보자기를 덮어쓰면 짐승의 소리를 인간의 말로 바꾸어 들려준다고 하는 설화도⁵⁰⁾ 있다. 마치 번역기를 귀에 걸면 외국어가 번역되는 것과 같은 보자기 이야기이다.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도 외국어처럼 배우고 익혀서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은 동물어 통역사로 직업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짐승의 말을 번역해주는 보자기 설화처럼, 최근에는 강아지말 번역기가 나왔다. 개가 짊는 소리를 번역해서 문자로 보여주는 애견 통역기 ‘바우링걸(bowling)’이 상품화되어 있다.⁵¹⁾ 이러한 문제의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면 관련 번역앱 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오랜 연구가 소요되지만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모든 동물은 언어를 구사한다.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도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추어 먹을 것이 있는 위치를 서로에게 알려준다.”⁵²⁾ 유인원과 원숭이의 모든 종은 물론 영장류도 목소리로 표현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동물학자들은 녹색원숭이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결과 특정 울음소리가 “조심해! 독수리야!”라는 뜻이고, 조금 다른 소리는 “조심해! 사자야”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학자들이 녹음으로 처음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원숭이들이 공포에 질려 하늘을 쳐다보았고, 두 번째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급히 나무 위로 피신했다.’고⁵³⁾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소와 닭, 거위, 양, 염소 등 가축들의 말을 알아듣는 앱을 개발해서 누구든 쉽게 주위의 가축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인간문명이 한 단계 비약할 것이다. 짐승과 상호소통을 하려면 짐승도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짐승소리로 바꾸어주는 번역 앱

47) 趙東一·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678쪽,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며느리’.

48) 초오보밍은 중국 통화사범대학원(通化師範大學院) 객좌교수로서 저명한 문학가이자 중국전통문화추진위원회 위원이며, ‘중국문화유산보호 10대 걸출한 인물’로 선정되었다.

49) 초오보밍 저, 우광훈, 이다연 역, 『새와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바닷바람, 2017 참조.

50) 成耆說, 『韓國口碑文學大系』 1-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1982, 520~524쪽, ‘짐승의 말이 들리는 요술 보자기’.

51) 강아지 음성 번역기 관련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QQXfKFo56cY&feature=youtu.be>)도 있다.

52)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사피엔스』, 김영사, 2015, 45쪽.

53) 유발 하라리 지음, 조현욱 옮김, 위의 책, 같은 곳.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짐승 → 인간’은 물론 ‘인간 → 짐승’의 양방향 소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다.⁵⁴⁾

짐승의 말과 함께 식물의 말도 알아듣는 기술개발의 꿈도 가져야 한다. 식물은 소리를 지를 뿐 아니라,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반응한다. 따라서 모내기 노래는 실제로 모가 자라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적절한 음악이나 민요를 들려주었더니 농작물이나 화초가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토마토에 브람스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식물이 음악을 듣고 잘 자란다는 것은 곧 식물도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실험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⁵⁵⁾

그런가 하면 나무도 소리를 내서 의사표현을 한다. 700살 먹은 용계은행나무는⁵⁶⁾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울어서 알려주었다고 한다. 날이 흐려지려고 하면 ‘뚝뚝르르’하고 울고, 모진 일이나 나라에 큰일이 터지려고 하면 ‘윙~윙~’하면서 운다는 것이다. 병자호란과 한일합병 때 은행나무가 울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6.25동란 때와 아웅산폭발사건 때는 은행나무가 우는 것을 마을사람들이 직접 들었다고 말한다.⁵⁷⁾

소리가 잠깐 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우는가 하면, 문고리와 문풍지가 떨릴 정도로 울어서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나무 밑에 가서 발을 구르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울었다고 했다.⁵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울음소리까지 의성어로 분별하고 있다. 용계마을 주민들은 은행나무의 소리를 듣고 나무가 말하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청주파수 범주 안에서 나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범주 밖에서 나는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다. 따라서 식물의 소리를 들으려면, 인간의 가청주파수 밖에 있어서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인간이 보고 듣는 것은 모두 가시광선이나 가청주파수 안에 있는 빛과 소리들이다. 그러므로 나무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없다고 해서 나무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극복해야 한다.

빛의 다양한 색깔을 보려면 프리즘과 같은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식물의 소리를 들으려면 가청주파수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전기기술자 조지 로렌스(George Lawrence)는 식물 조직이 식물의 소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원통형 패러데이 상자(faradaycage)⁵⁹⁾ 안에 살아 있는 식물조직을 비치하여 나무의 소리를 듣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 소리감지기 장치를 한적한 숲속에 설치하고 나무에 자극을 주자, 그때마다 휘파람 소리와 닮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⁶⁰⁾

로렌스는 이 실험으로 식물이 외치는 소리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셈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동식물과 ‘공다체’를 이루고 2.0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짐승은 물론 식물과 대화하는 소통장치를 일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니코스 카잔자키스(Nikos Kazantzakis)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대목이다.

대장, 우리가 돌과 꽃, 그리고 비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아마도 우리에게 소리를 치는데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들이 못 알아듣고요. 대장, 언제나 이 세상의 귀들이 뚫릴까요? 언제나 우리들 눈이 열려 사물들을 보게 될까요? 언제 우리

54) 임재해, 「설화에서 공유된 자연생명의 생태학적 재해석과 재창작」, 『남도민속연구』 41, 南道民俗學會, 2020, 44쪽.

55) 피터 톰킨스.크리스터 버드 지음, 황금용.황정용 옮김, 『식물의 신비생활』, 정신세계사, 1992, 35~53쪽 참조.

56) 안동 길안면 용계리 744번지 임하댐 수몰지역에 있는 수령 700년의 은행나무이다. 천연기념물 17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57) 임재해,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 지식산업사, 1992, 185쪽.

58) 임재해, 앞의 책, 같은 곳.

59) 외부 정전계(靜電界)의 영향을 차단하는 상자로서 물리학의 실험도구이다.

60) 피터 톰킨스.크리스터 버드 지음, 황금용.황정용 옮김, 앞의 책, 71~73쪽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가 팔을 벌려 돌과 꽃과 사람이 서로 껴안게 될까요?⁶¹⁾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작품의 주인공 ‘조르바’의 입을 빌어서, 동물과 식물은 물론 무생물과도 서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다. 문학적 창조력과 인간적 상상력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동식물의 소리를 듣는 연구를 하고 자연생명과 소통하는 꿈을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자면, 소통의 세계를 인간에서 자연으로 확대하여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술개발의 영역과 수준도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⁶²⁾ 생태학적 변혁은 사회과학적 변혁과 함께 기술 개척의 변혁도 촉발한다.

7. 양방향 소통의 합일 기능과 탈중심주의 가치

소통은 인간사회의 화합은 물론 다른 존재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옆집 사람이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남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아도 서로 소통하는 사람은 친구가 된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아도 소통이 없으면 서로 누군지 모르지만, 딴 나라에 살아도 페이스북으로 늘 소통하는 관계라면 서로 친구이다. 따라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이제는 폰 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폰 사촌’이나 페이스북에 자기 글과 사진을 공유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페이스북 친구’라는 말이 더 실감난다.

말귀를 알아먹는 반려견이 가족 이상으로 친밀한 것은 소통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서로 다른 종이라도 같은 종 못지않게 가까워질 수 있다. 용계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당나무처럼 위하고 섬기며 보살펴왔다. 일찍이 행정계(杏亭契)를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은행나무 관리와 축대 보수 작업을 하고 관련 내력을 기록하여 『행정수계목록(杏亭修契稟目錄)』을 남겼으며, 은행나무를 기리는 선비들은 시를 지어 『杏亭詩帖』을 문집으로 발간했다.⁶³⁾ 아마 한 그루 나무를 두고 읊은 시를 모아서 시집을 간행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한다. 마을과 나라의 큰일을 미리 알려주는 나무인 까닭에 주민들은 은행나무를 한갓 나무로 여기지 않고 위인(偉人)처럼 모시고 기리는 시를 지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용계사람들에게 은행나무는 사실상 주민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인식된 셈이다.

용계사람들과 용계은행나무의 양방향 소통은 ‘사람과 나무’를 상생의 합일에 이르게 만든 훌륭한 보기가이다. 마을이 임하댐으로 수몰이 되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은행나무는 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⁶⁴⁾ 이러한 소통의 결과이다. 이처럼 인간이 자연과 상호 소통이나 교감으로 합일을 이루는 뿌리 깊은 전통이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이다.

천인합일이 총론이라면 각론으로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전통도 뿌리 깊다. 철학적으로 인내천(人乃天) 사상이 있는가 하면, 문화적으로는 무당의 빙의현상이 있다. 무당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은 영매로서 신과 소통하기 때문이다. 신이 내려서 무당에게 지피게 되면 신인합일을 이루면서 신과 소통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신의 공수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매로서 무당의 신통력이자 굿의 영험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다른 종의 소통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월의 계기가 된다.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인간과 기계의 합일이 새로운 조류가 될 것이다. 인간과 기계가 유기체로 만나는 것이 사이보그이고, 인간과 기계가 개체로서 만나는 것이 안드로이드다. 사이보그는 인간의 신체에 기계를 결합시킨 것이고, 안드로이드는 기계에 인공지능을 부여한 것이다. 둘 모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꿈의 실현이다. 지금 우리는 신인합일의 꿈에서 기인합일(機人合一)의 꿈으로 가

61) 니코스 카잔자키스 지음, 유재원 옮김, 『그리스인 조르바』, 문학과지성사, 2018, 172쪽.

62) 임재해, 「설화에서 공유된 자연생명의 생태학적 재해석과 재창작」, 『남도민속연구』 41, 南道民俗學會, 2020, 44~46쪽.

63) 林在海, 「元龍溪 마을의 性格과 說話의 傳承」 I, 『安東文化』 5, 安東大學 安東文化研究所, 1984, 45~70쪽 참조.

64) 임하댐 조성으로 은행나무도 마을과 함께 수몰될 위기에 처했으나,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은행나무를 옮기지 않고 제자리에서 위로 들어 올려 복을 돌우는 방법으로 살려냈다.

고 있다.

인간 속에 내재된 신성을 자각하는 신인합일처럼, 인간 속에 내재된 알고리즘을 기계의 알고리즘과 결합하는 것이 기인합일이다. 인간의 초월을 꿈꾸는 신인합일 사상은 여전히 문화적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생체공학의 발전으로 인체가 기계와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초월을 꿈꾸는 것이 기인합일이다. 앞으로 기인합일은 사이보그 시대를 열고 안드로이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초월을 꿈꾸는 인간이 신인합일의 깨달음을 얻는데 머물지 않고, 기인합일의 과학기술을 개척하는 데까지 나아감으로써 포스트휴먼 세계를 창출하게 되었다.

‘나 없는’ 대아를 자각하게 되면,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사실상 인간은 무수한 존재와 합일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형이상학적 신인합일과 형이하학적 기인합일만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합일도 현실이다. 이미 우리 체내에는 엄청난 수의 세균들이 살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다. 이 미생물들은 인간이 소화하고 흡수한 양분으로 살아가며, 인간도 이러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건강하게 살아간다.

이런 사실은 장내 세균학이 발전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균인합일(菌人合一)의 관계를 이루며 지금껏 상생해 왔고 앞으로도 상생해야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셈이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내적으로 균인합일의 세계를 이루어서 건강하게 살아온 것처럼, 외적으로도 천인합일의 세계를 이루어서 현재까지 인류가 번성할 수 있었다. 미래에도 이러한 양극의 합일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인간중심주의 탓에 위기를 조성하게 된 것이 현재적 상황이다.

균인합일에서부터 천인합일까지 삶의 실상을 되짚어 보면, 인간중심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새삼스럽게 포착된다. 인간은 자연과 공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에 기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처럼, 인간이 체내의 미생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인간과 미생물의 관계도 재인식되어야 마땅하다. 미생물 덕분에 인간이 생존 가능할 뿐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인간의 두뇌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⁶⁵⁾ 인간은 미생물에 기생하는 존재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미생물 또한 인간 체내에서 기생하는 존재인 까닭에, 인간은 미생물과 ‘상호기생’하는⁶⁶⁾ 관계라 하겠다.

인간이 미생물과 상호기생하는 존재라면 인간이나 미생물이나 피장파장이어서 우열이 없다는 말이다. 생리학적으로 미생물과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은 오만을 넘어서 심각한 착각이자 판단 오류이다. 인간은 가장 작은 생명인 미생물과, 가장 큰 생명인 지구생태계에 기생하는 존재라는 것이 정확한 자리매김이다. 이러한 기생관계를 탈중심주의 관점에서 인식했을 때 비로소 ‘합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합일의 세계상은 기생으로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매우 과분한 일로 여겨야 할 일이며,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앞으로 추구해야 할 탈중심주의적 미래 가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5)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화 흡수를 돕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던 장내 미생물이 비타민을 합성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 따라 우울증을 앓거나 뇌 대사물질이 변화되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천종식, 「장내 미생물은 저 멀리 뇌에도 영향 미친다」, 한겨레, 2019. 4월 8일자 참조.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889000.html)

66) 상호기생은 상생과 다르다. 상생은 공존하는 대상이 없어도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존 대상과 협력하므로 더욱 번성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기생은 공존하는 대상이 없으면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관계이다. 따라서 인간과 체내 세균은 제각기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상호기생 관계에 있다.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1)

박충구(생명과 평화 연구소 소장, 사회윤리학)

1. 들어가는 말
2. 독일의 다문화 정책
 - 1) 독일의 다문화 정책
 - 2) 정치(시민)교육의 과제
3. 독일의 시민교육(Politische Bildung)
4. 정치교육의 논리와 구조
5. 통합정책과 교과과정
6. 독일 정치교육 교과서 분석
7. 단계별 교육구조와 이해지평
8. 나오는 말: 인간화와 민주화를 통한 공존

“주어진 사회는 인종차별 사회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 Fran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1. 들어가는 말

다문화 사회의 등장

현대 세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주체와 객체의 혼란 현상이다. 고정되어 있던 문화적 체제가 흔들리고 낯선 것들이 유입하면서 주체의 혼란이 일어나는 까닭이다. 주체만은 분명할 것이라고 믿던 관계 구조도 주체의 해체와 변종의 등장으로 주체조차 모호해진 세상이 되었다. 계몽주의 이후, 모더니티의 강고한 권력화는 포스트모더니티에 의해 해체되고, 새로운 대안은 모호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의존해 있던 실존적 가치체계인 가부장주의, 남성우월주의, 국가주의, 애국주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 등이 그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정황을 드러낸다.

과거의 문화적 유산 속에서 형성된 가치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들이 형성되는 다양한 역사의 지평에서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니다. 권력화 되었던 주류 종교들은 사라지고, 이웃종교와의 상호 이해와 공존을 도모하는 입장으로 자세를 바꾸었다. 과거에 종교가 결탁했던 가부장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와 같은 이념들이 그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종교도 사실 일정 부분 종교의 권위와 윤리적 담론의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적어도 의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우월적인 세계관의 몰락과 더불어 뚜렷하게 드러난 여성의 권리와 자유에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새롭게 이해된 여성의 자율성과 행복,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검열당한 성과 사랑, 노동과 가족 관계의 새로운 포맷이 공장 출산을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좋은 영양과 위생, 그리고 생명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된, 비교적 안전한 사회에서 의료복지가 수명의 연장을 불러와 사회구조 변동에 지

1) 이 글은 출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자료로 준비되었음을 밝힙니다.

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문화 사회를 불러들이게 된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출산율 저하와 사회의 고령화가 전통적인 사회 구성비에 변화를 불러오고,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이나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이민 혹은 이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여성의 자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부당한 남성 우월적 문화의 몰락의 결과, 그리고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제공한 삶의 질 향상이 동반해 온 수명의 연장이 인종적, 문화적 사회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결국 다문화 현상은 산업혁명 이후 풍요에 길든 선진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와 욕망의 지속과 확대를 위하여 주류 거민들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노동력으로 노동 총량을 보충하기 위한 의도의 결과라고 본다. 일종의 피할 수 없는 강요상황(Sachzwang)이다.

다문화 개념의 다양성

“다문화”는 하나의 복합적인 사회 문화적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영어의 다문화(multi-cultural)와 독일어의 Multikultur는 개념상 동일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많음을 뜻하는 접두어 "multi"보다 사이, 상호작용, 경계 넘기 등의 의미를 가진 간(間)문화 inter-culturelle) 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²⁾ 결국 다문화 상황에서 문화 상호간의 다양한 현상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다문화” 혹은 “간문화”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변동 현상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 정의가 매우 어렵다.

나는 다문화 현상을 일컫는 “다문화”(다수의 문화의 공존) 개념보다 “간문화”(문화와 문화 사이의 관계)개념이 더욱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다양한 문화권이 공존하는 지구적 상황을 이룰 때에는 다문화라는 병렬적 의미가 적절하지만, 특정한 문화권과의 조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 간문화 현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전체를 보면 다문화지만, 사실 개별적으로는 간문화적인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런 사회 현상을 경험해온 독일, 프랑스, 영국, 스위스, 캐나다 같은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길을 찾기 위해서 나는 먼저 우리 사회가 비교적 오랜 기간, 비록 형식적이거나 단일민족적 문화적 특성을 유지해온 사실에 비추어 다소 비교 가능한 사회 모델을 “다문화 상황”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다인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자이크 사회의 다문화성보다, 비교적 단순한 인종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간문화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일면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 사회에서 형성된 다원성(plurality)나 다양성(variety)에 대한 경험의 축적이 우리에게 더욱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몇 가지 살핀다면, 첫째, 독일은 2차 대전 직후부터 외국인의 유입이 시작되어 우리보다 약 50년 정도 앞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났다.³⁾ 따라서 약 50년 늦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선행 사례로서 참고하기에 비교적 적절하다.⁴⁾

둘째, 독일은 유럽 사회에서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 비교적 뒤늦게 민주화의 과정을 받아들였지만, 두 번의 전쟁을 치렀으며, 나치 제 3 공화국이라는 독재적 상황을 초래한 역사적 오류가 있고, 우리와 같이 분단을 겪은 사회다. 세밀한 분석에서는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역시 전쟁의 경험이 있고, 이승만 및 군부 독재의 경험이 있으며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 상황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일이 1989년 분단 상황을 극복했으므로 선행 사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2) 참조,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비경과 쟁점” *교육과정 연구*, vol. 10, no. 2 (2007): 53-76.

3) 독일은 2차 대전 직후 독일어권에서 유입된 이들로 전쟁 후 인력난을 다소 극복했으나 1950년대부터 외부 노동력 유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4) 이현정은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상황을 설명하면서 2050년경에 이르면 이주민이 전국민의 21.3%에 이르러 오늘의 독일 사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서울: 서울메이트, 2009), 26.

셋째, 독일에서의 다문화 정책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성장 과정을 거쳐 외국인의 유입만이 아니라 동서의 이념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열었다고 보아 우리에게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연구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현실을 수용하고, 분단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상당부분 맞춤형 모범 사례로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독일과 다문화 정책

1) 독일의 다문화 정책

다문화⁵⁾ 현상을 직면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시각은 주체와 객체라는 이중적 구조가 작용한다. 독일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유입된 소수자의 시각과 다수를 이루는 주류 거주민의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두 종류의 시선은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주자와 주류 집단의 갈등관계에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이주자와 주류거민의 이항 대립 구조는 이주자와 주류거민 사이에 법적(시민권 취득), 혹은 관계적 변화(결혼)가 일어날 경우 대립 구조를 지탱할 수 없다. 그러나 독일의 다문화 현상의 초기 구조를 보면 이주자와 주류거민 사이에서 이주자를 객체로 다룬 흔적이 역력하다. 이 오류는 이주자를 통제, 제한하려는 주류 거민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외부인에 대한 편견, 배타와 권리부여 거절이라는 영토 지키기 욕망의 속내가 들어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독일사회는 이미 그런 욕망을 지켜낼 수 있는 수단이 고갈되어 있었다.

독일에서의 간 문화 정책은 이주 노동자가 독일로 유입해 들어오기 시작한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뚜렷한 원칙이 없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직후부터 외국에 살고 있던 독일인들의 귀국 붐이 일어 상당부분 노동력이 보충되다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독일 인구의 2%를 넘자, 비로소 첫 번째 정책인 “회귀 정책”(Rückkehrpolitik)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⁶⁾ 회귀정책이란 유입된 외국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환상에 기초한 정책이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유입된 노동인력이 노동 허가 기간 이후에는 돌아갈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법적으로 보완하여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기간만 비자를 주고 그 이상 체류하거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법적 제재를 가하면 이주 노동자들이 돌아갈 줄 알았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생겼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독일 사회에 남기를 원했고, 고용주들은 숙련 노동자들을 보내고 미숙련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합리의 해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경제적 이유를 넘어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독일 문명구조에 더욱 친근성을 느끼는 세대로 성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인 독일 정부는 새로운 정책, 즉 동화정책(Assimilationspolitik)을 적용하려 했다. 소수자인 이주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독일에 영주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들이 독일 사회에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영구 정착자 수가 늘게 되었고, 이주민들은 독일 사회에 정착해 들어갔으나, 정착 이주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현상이 생기고 독일 사회로의 동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서 주류 거민과 이주민 사이에 장벽이 생기고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이 독일인들의 종교, 문화를 따르지 않고 그들만의 종교나 문화적 관심을 지키며 그들만의 계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주민들의 계도를 해체시키고 그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려 들던 입장에서 이주민은 여전히 독일 주류 사회의 객체로 여겨졌다.

이주민들의 수가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넘길 무렵 독일 사회는 소위 다문화

5) 참조,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 연구*, vol. 10, no. 2 (2007): 53-76.

6) 독일의 다문화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적 이해는 박충구, “독일 다문화 사회 이행과정이 한국사회에게 주는 함의,” *2009 한/독 민주시민 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09), 103-129 참고하였다. .

(Multikulturpolitik)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류 거민들을 교육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여기서 다문화라는 개념은 우월과 지배, 혹은 주류 문화와 종속 문화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이주자들과 더불어 유입된 문화적 양태나 종교를 긍정하기 시작한 상황을 묘사하는 용어를 의미했다. 이를 위하여 신분적 차별 철폐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고(1997)이 다양한 차별을 해체하기 위한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 뒤따랐다. 소위 반차별법(2006)이다.⁷⁾ 여기서 종교는 배타적 도식을 버리고 다원적으로 이해되었고, 자국민의 문화를 우월하게 본 오만을 떨쳐내고 병립적인 것으로, 그리고 주류 주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각급 학교에서는 소위 정치(시민)교육(Politische Bildung)이 적극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만족스러운 결과보다는 비판적 논거를 많이 불러일으켰다.⁸⁾ 이런 노력은 1980년대를 지나 90년대 중반까지 어어 졌다.⁹⁾

제 4기의 정책 변화가 일어난 시점은 1990년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귀화- 동화-다문화를 거쳐 정책의 초점이 통합으로 모아져, 소위 통합 정책(Integrationspolitik)이 적용된 시기다. 1997년 외국인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을 향한 차별구조가 제거되었다. 사회정책을 통한 이주자의 인권을 신장하고, 국적법을 개정하여 귀화자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하기 시작한 해가 2000년이다. 이어 2005년에 신이민법이 발효되었고, 2007년에는 국가통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당시 귄터 술제(Günther Schultze)¹⁰⁾는 통합정책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1)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주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일부가 되고, 2) 사회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3) 그리고 인식능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어교육과 더불어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과제, 4) 사회적 차원에서는 독일 사회 안에서의 소통과 토착화된 관계들을 촉진하는 것, 5) 그리고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이주민을 받아들인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연대의 범주, 국적부여 등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¹¹⁾, 술제가 본 통합정책의 과제는 완전한 차별의 폐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독일의 다문화 정책 4기를 핵심 용어로 요약한다면 무책임 -> 동화(교육) -> 권리 인정(법치) -> 내(內)집단화(통합)의 방향으로 그 중심축을 옮겨 온 셈이다.

2) 정치(시민)교육의 과제

이상과 같이 크게 보아 4 단계의 과정(회귀-동화-다문화-통합)을 거치면서 독일은 오늘의 통합정책을 다문화 정책으로 안착시키고 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화간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¹²⁾를 넘어서, 인정만이 아니라 약자의 차이도 극복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독일인의 정체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등에 대한 토론을 거치며 새로운 이해지평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인종적 순혈주의는 타인종 간의 혼인과 출산을 통해 인종적 변종의 출현으로 인해 상당부분 지워지고 있어서 독일인의 정체성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과거처럼

7) 연방차원의 평등법이라 할 수 있는 반차별법은 신분, 인종, 성, 신앙, 기회, 주거, 교육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각 주별로 반차별법 제정이 뒤따랐다. 이 법은 다문화 상황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악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 및 시민적 평등법의 성격을 가진다.

8) 메르켈 독일 총리(2010.10.16)와 캐머런 영국 총리(2011.2.5),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2011.2.9)등이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이어 야글란 유럽회의 사무총장(2011.2.17)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9) 2021년 한 해 독일에서 인종차별 범죄로 기록된 사건은 한 해 2000건이 넘었다.

10) Referent im Arbeitsbereich "Migration und Integration" der Abteilung Wirtschafts- und Sozialpolitik der Friedrich-Ebert-Stiftung.

11) Günther Schultz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em Weg zu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32 (1992): 247-269.

12) 이 개념은 Charles Tayl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Princeton UP., 1992)에서 다문화 상황에서의 과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강자에 의하여 약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약자는 무엇을 인정하는가?의 문제가 남아, 인정만이 아니라 기본권의 향유와 보장이라는 권리 이해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 세계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도 독일인의 특징이 될 수 없었다. 심지어 국가에 대한 이해도 새로 유입된 국적 취득자들로 인해 새로운 국가 공동체 이해의 요구를 담아야 했다. 이런 흐름에 독일 내 우파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았다.¹³⁾

소위 특수성은 사라지고 보편적 규정들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독일인을 규정하는 새로운 규범들은 헌법애국주의, 즉 피부와 생김새, 종교가 무엇이든지 독일 헌법과 법을 따르고 지키는 이가 독일인이며 애국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독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인종적 편견을 수정하라는 요구가 되었다. 이주민을 주류 문화권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이나 상호 인정과 존중을 통해 문화적 공존을 도모했던 다문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주류 거주민의 변화보다는 이주자들의 적응과 변화를 요구하고 안내하려던 입장에서 통합정책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에는 이주민만이 아니라 주류거민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은 독일인들의 정치 이해에 심각한 전근대적인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재교육을 시민교육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정치교육(시민교육)원을 설립한 후 주류 거민들의 정치의식 속에서 과거의 기독교 문화가 남긴 질서 신학적 오류를 민주적으로 수정하려 노력해 왔다. 그 이후 독일의 정치교육을 수행해온 독일 정치교육원은 연방차원의 조직과 각 주 조직을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정치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있다.¹⁴⁾

독일이 여러 차례 실험적 과정을 거쳐 통합정책에 이른 것은 이전의 정책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수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대부분의 독일 시민들은 정부의 통합정책에 대하여 불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주의 정책기와 맞물린 독일 통독과정에서 이슬람의 세력화를 거부하며 인종적 적대감을 드러낸 타인종 공포(xenophobia) 현상은 주류 거민들이 이민자들을 향한 거부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⁵⁾ 수용과 거부, 비판적 논의가 상당하지만, 이런 과정적 반응은 보다 합리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통합에 이를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본다.

3. 독일의 시민교육 (Politische Bildung)

그렇다면 통합정책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독일에서는 공적 여론은 공적 정책으로, 공적 정책은 입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모든 것의 바탕은 시민 교육이다. [영어권에서는 시민교육(civil education)으로 불리지만, 독일에서는 중앙 및 지방 정치교육원이 따로 설립되어 통합정책의 기본 방향이 교과과정화 되고 있다. 독일어로는 Politische Bildung(정치교육, political education)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는 내용이다.] 중앙 정치교육원 및 각 주 정치 교육원은 나름대로 정치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 교재를 통하여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부터 총 3년 과정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현실은 있지만 다문화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일 것이다. 다문화 정책은 공공의 여론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여론이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은 법적 제도와 장치로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은 다문화 현실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통합정책에 이르렀고, 통합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공공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작업을 정치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여기서 다문화적 공존의 과제는 다문화의 예찬이 아니라, 공동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다양성과 다문화 현상의 복잡한 구조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13) Michel Burker, "Multiculturalism Fails in Germany," *World News Commentary*(July 13, 2007).

14) 독일 정치교육청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주성훈,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s://nas.na.go.kr/flexer/index2.jsp?ftype=hwp&attachNo=461755>

15) Sabine von Dirke, "Multikuli: The German Debate on Multiculturalism," *German Studies Review*, Vol. 17, No. 3(Oct, 1994): 513-536.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버리는 이유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 교육이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 다양성과 다문화적 공존의 지평을 열어 나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가치,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최대의 공통분모는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민주적 정치역량을 키우는 과제가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이런 이해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여러 단계의 정치 교육적 성장 과정을 거쳐 왔다.

기센 대학 사회과학 교수 볼프강 잔더(Wolfgang Sander)는 지난 50년간 독일에서의 정치 교육의 과정의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¹⁶⁾

1) 2차 세계 대전 직후, 1950년대에는 미국이 주도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재교육이 광범위하게 실시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논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교육을 일종의 도덕교육이나 사회교육에 더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정치교육의 목적이 동독에서처럼 정당지지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정치적 참여자 교육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때 정치교육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그리고 시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2)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정치교육이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 통일을 위한 정치교육(Deutsche Vereinigung für politische Bildung) 교사연대가 1965년에 조직되었다. 소위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온 68 학생혁명과 그 여파에 영향을 받아 자본주의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커졌고, 이 때 무수한 작가들이 **정치교육은 반드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했다. 물론 여기에 반대해 기존의 정치 질서와 제도를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3) 민주화나 기존 체제 옹호나를 놓고 10년의 토론 과정을 거쳐 1976년 보이텔바하에서 하나의 합의(Beutelbacher Konsens)¹⁷⁾가 이루어졌다. 정치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나 변화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상이한 입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고유한 판단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다. 이 원칙은 주입식 이념 교육의 종말과 더불어 학생들의 **자기 및 제도, 미디어, 이념 비판적 정치의식**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4) 약 50년에 걸친 정치교육을 통해 거듭 정치교육 목표와 기준이 재설정되었다. 오늘날 정치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정치 능력 함양”에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과제는 세 가지 분과적 과제를 포함 하고 있다.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행동능력, 그리고 방법론적인 능력 함양**이다. 바로 이 세 가지 과제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1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상급반과 직업학교 학생들 정치 교육 과정 안에 다양한 현안과 주제들 중심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처럼 독일 정치교육원의 존재 의미는 **학생에게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강화 증진하고 정치적 행위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찾는 공존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4. 정치교육의 논리와 구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은 전체주의와 민주주의, 진보와 보수, 좌우 이념, 민주주의, 인종, 종교 및 사상의 다양성 등의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사회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16) Wolfgang Sander, "1945 bis heute: Von Anfang bis PISA"(19.03.2015):<https://www.bpb.de/lernen/politische-bildung/193808/1945-bis-heute-von-anfang-bis-pisa/>

17) Beutelbacher Konsens (1976)에서 독일 정치교육 관여자들은 독일내 정치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주입식 교육금지 원칙, 논쟁적 수업 원칙, 피교육자 지향 원칙. 이 합의의 정신은 교사의 가치, 판단, 신념, 이념적 선호성을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을 금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교사의 역할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논쟁하고,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00년대 이후, 독일 정치교육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통합 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이런 통합적 과정에 다문화적 공존의 사회철학이 담겨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과정을 도해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여기서는 시간의 한계상 대략의 구조와 논리를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이 분석에는 독일 초등학교 정치교육교재, 중등학교 1과정의 정치교육 교재,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교사들을 위한 자료집을 참고 하였다.]¹⁸⁾

민주주의는 다문화 상황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가장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가치와 체계를 지닌 일종의 삶의 양태(Lebensform)다. 민주주의가 오늘날 가장 합리적인 공존의 정치의 수단이 된 것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전근대적인 권력, 특권의 해체**를 통해 자유, 평등, 정의, 그리고 연대라는 기본가치를 축으로 하여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옹호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주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우리가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모두 다문화주의자이고“(We are all muticulturalists now.)¹⁹⁾ 또한 다문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적 상황에서의 민주적 가치, 절차를 통한 합의방식, 그리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인간의 욕망을 보장하거나 통제하는 법치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길 외에 어떤 더 좋은 수단이 강구될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 정황에 대한 정치교육이 독일에서는 “민주주의” 시민 교육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민주주의야말로 자국민과 이주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내집단과 외집단을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내용, 즉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5. 통합 정책과 교과과정

다양한 문화적 요인들이 혼재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주류 집단이 내집단이 되어 외집단을 거부하는 바, 다양성에 대한 거부 현상이며, 그것은 일방성에 근거한 다양한 형태의 편견과 차별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 의식을 운용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의 핵심 과제다. 이는 민주적 의식 및 정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지식과 능력의 함양에 목적을 두면서도 동시에 사회규범들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두고 그것들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제를 이르는 것이다.

다문화성은 일종의 세속화된 사회의 강요 상황을 이른다. 선택이나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특정한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 우월성이나 획일성을 주장할 경우, 그것은 다문화사회 속에서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되고,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민주적 비판담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 사고는 특정한 가치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위하여 “이미 부여된”, 편견, 차별과 배제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요구한다. 사실 편견과 차별, 배제의 논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내집단의 이익관계를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윤리적 정당성이 약하고 균형을 잃은 가치판단을 유통하는 전통이나 습성에 편승하고 있는 것들이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을 통해 극복해온 문제들은 독일 사회의 전근대성, 질서 신학적 권력이 해, 그리고 신학적 감사와 복종의 윤리가 유통되면서 나치 전체주의를 불러들였던 오류와 그 유산을 극복하는 과제, 그리고 그러한 체제들이 남긴 편견들이었다. 2차 대전 직후 정치교육은 나치즘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공민 교육이나 교회의 신자교육과 같은 시스템을 정치교육의 모델로 삼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었던 전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을 위

18) 부란덴부르크(베를린) 지역 교육자료: 초등학교 3-4학년 정치교육 교과서(2005), 2) 짐나지엄 초급 학년 정치교육 교과서(2008), 3) 짐나지엄 10-11학년 정치교육(2006) 교과서.

19) Nathan Glazer, *We Are All Multiculturalists Now* Cambridge: Harvard UP, 1997). Recited from Douglas Hartmann and Joseph Gerteis, "Dealing with Diversity: Multiculturalism in Sociological Terms," *Sociological Theory* 23: 2 (June 2003): 218-240.

한 제 3의 길은 보다 민주적이고 이념의 다원성도 승인하는 입장이 아니면 안 되었다.

1976년에 나온 보이텔바하 합의는 이런 상황을 잘 담아 낸 하나의 사례다. 이 합의를 실천 하면서 이념적 극단론은 배제되고, 비판적 사고와 더불어 합리적 판단을 승인하는 새로운 관용의 윤리가 형성되었다. 정확한 사회과학적인 근거 없이 신념(Gessinnungsethik)에 기반한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실 일종의 편견이다. 그리하여 전후 세대는 정치교육을 통해 상대를 악마화 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비판적 사고를 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교사의 가치가 주입된 교육을 배제하고, 논쟁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며,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정황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적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이다. 2005년경부터 시작된 통합정책과 맞물려 독일의 정치교육은 이전보다 더욱 이데올로기의 포로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가치에 그 중심축을 두고 탈 허위민족주의적인 방향에서 다문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²⁰⁾

6. 독일 정치교육 교과서 분석

독일 교육 구조를 보면 초등학교는 4년 공통과정이지만, 중/고등학교는 전문성을 추구하는 학제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갖추고 있다.²¹⁾ 그리하여 총합 12년의 교과과정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12학년의 과정 중 독일 정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초등학교(Grundschule) 3/4학년 과정이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은 정치교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의 일부를 학교 사회를 통해 학습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데 삶의 양태로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als Lebensform), 사회 양태로서의 민주주의(als Gesellschaftsform), 그리고 지배형식(als Herrschaftsform)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²²⁾ 이 과정 중 삶의 양태로서의 민주주의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쳐진다. 그리고 그 외 두 가지 교육내용은 상급학교 과정에 속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유 민주사회의 정치적 이해구조의 기초를 가르친다.

발달심리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 4세 전후에 정치적 판단, 즉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불공정한지를 인식하게 된다고 볼 때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공정함과 평등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회교육의 한 방향일 것이다.

1) 초등학교 3/4학년 정치교과서

독일 베를린 지역과 브란덴부르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정치교육 교재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담아 그 기초적 이해를 돕고 있다.²³⁾ 주요 교육 명제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기로 한다.

제 1 단원: 민주주의(Demokratie)

- 헌법과 인권/ - 교육방법: 헌법조항 문장 사용/ - 학교의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청소년들의 권리로서의 법/ - 교육방법: 토론 규칙/ - 다수결의 원리/ 학급관리(Klassenaemter)/ - 교육 방법: 역할극, 학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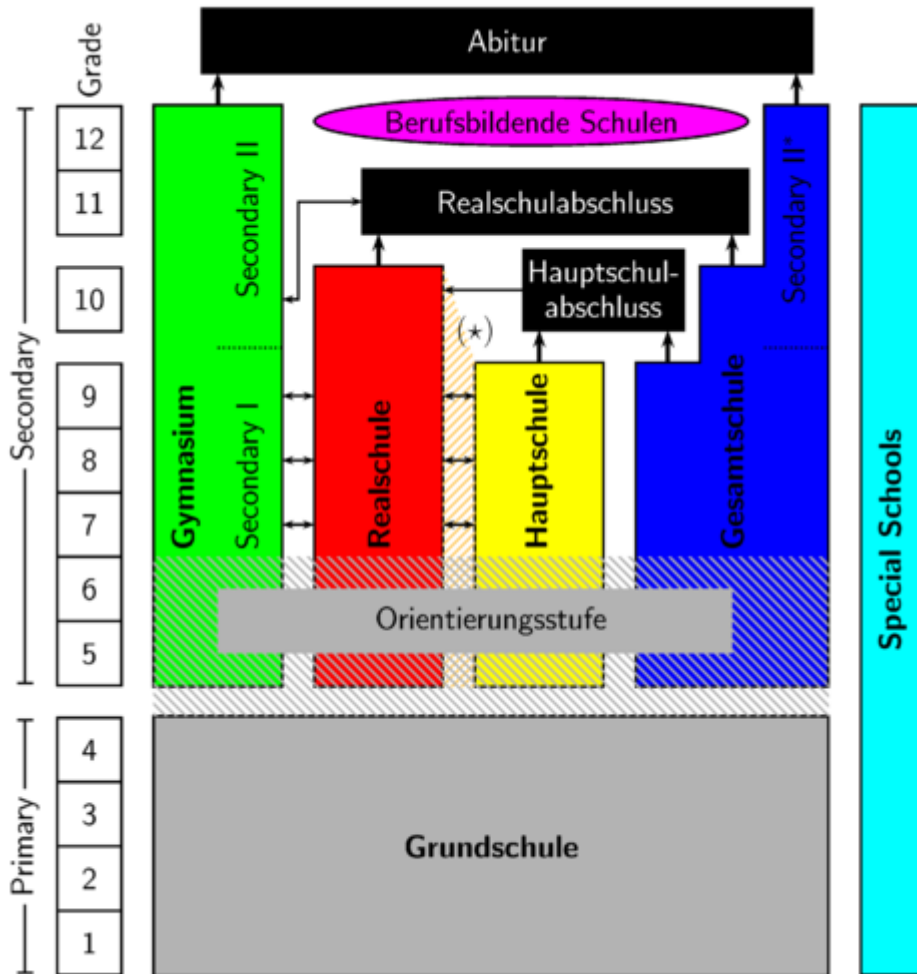
20) 프랑스 역시 2007년 5월 “이민, 통합, 국가 정체성 협력 발전부”라는 부처를 새롭게 출범시켜 이전의 이주민 부서들을 통합했다.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주요 과제는 “다양성으로의 개방, 기회균등과 평등, 사회적 통합”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부정적 편견과 민족적 상투성 극복,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연대와 시민적 책임 나누기 등이 논의되었다. 참조,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 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vol. 10, no.2(2007), 65이하.

21) 독일의 대학 이전의 학제

기타주제: -갈등해결을 위한 규칙과 수습방법/ -브란덴부르크 공동체와 베를린 지역의 과제
 -브란덴부르크 공동체와 베를린 지역 사회문제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하여/ -청소년에 의한 정치 -
 인쇄매체/ -공공/사설 텔레비전 방송/ -미디어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즐거움/ 교육방법: 탐구조사
 - 설문조사 수행/ -독일에서의 언론의 자유/ -정보와 영향력/ 종합

제 2 단원: 어린이 권리(Kinderrechte)

- 어린이 권리 선언²⁴⁾/ - 사적 권리와 공적 권리 이해/ - 부모의 의지 - 양육의 변화; 폭력 없는



- 22) Peter Massing, "Politische Bildung in der Grundschule Ueberblick, Kritik, Perspektiven," *Politische Bildung von Anfang an*, Hrsg. Dagmar Ruchter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7), 18.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이해는 독일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가 개신교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밝힌 백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참고, EKD, *Evangelische Kirche und freiheitliche Demokratie: Der Staat des Grundgesetzes als Angebot und Aufgabe* (Guetersloh: Guetersloher Verlaaghaus Gerd Mohn, 1985), 34.
- 23) Christian M. Ernst, hrsg. *Arbeitsbuch fuer Politische Bildung: Grundschule Berlin und Brandenburg 5/6* (Berlin: Cornelsen, 2005). 이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서 독일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에서 출판한 *Demokraie verstehen lernen: Elf Bausteine zur politische Bildung in der Grundschule*(Bonn: Bpb, 2008)은 초등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하여 11가지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학급대표선출과 학급회의 - 국민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규칙과 법/아동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생산과 노동/ 이해갈등: 새로운 일자리/ 다원성/정치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으로 이해하기/전쟁과 평화/사회개혁자의 발자취를 찾아서/ 대중매체 속에서의 정치/ 디지털 영화 만들어 상영하기.
- 24) 어린이 권리 선언. <그림 출처: *Arbeitsbuch fuer Politische Bildung: Grundschule Berlin und Brandenburg 5/6*, 46.>

양육을 받을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 우리와 함께 사는 장애인, 교육방법: 벽보준비/ - 건강하게 살 권리/ - 건강하게 살 권리로서 청소년 보호법, 교육 방법: 통계와 도표이용/ - 곤경에 처한 아이 돕기- terre des hommes,²⁵⁾ 교육방법: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 -세계 어린이 구호단체/ 종합

제 3단원: 평화지키기

- 전쟁의 원인과 목적/ - 전쟁의 결과/ - 평화의 상징, 교육방법: 보고서 작성과 취급, 결과 보고/
- 소년병(Kindersoldaten)실태/ - 세계 평화를 위한 UN의 노력/ - 유엔군의 투입/ 종합

초등학교 3-4학년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독일 정치교육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란 모든 인간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삶의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초등학교 학급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놓았다. 즉 초등학교 3-4학년이 되면 독일 교육법에 의하여 학급 대표를 뽑아 반드시 자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신민으로서의 희생, 자발적인 복종, 영웅적인 희생을 가르치는 교과 내용이 많았으나 지금의 과정은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바탕 환경이 평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를 깨는 전쟁의 부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교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초등학교



25)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인간의 대지.

교과과정에 담긴다..

- 1) 민주주의는 법치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인권법에 의한 평등한 사회 건설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동시에 왕정구조의 불평등 구조나 일당독재의 폐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도모한다.
- 2) 학생들의 삶의 영역인 학교, 그리고 지역에서 어떻게 민주적 참여와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를 학급회나 총학생회 대표 선출에 대한 지역 교육청의 학칙을 따라 실천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인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이해시키고 있다.
- 3)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 토론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성에 기초한 합의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돕는다.
- 4) 법 적용의 두 영역,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해시키고, 청소년들이 민주사회에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돕는다.
- 5)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독일 청소년 인구의 약 5% (21명중 1명이 장애인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에 달하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연대적 사고 형성을 돕고 있다.
- 6) 민주사회는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며 다양한 권리를 지키는 사회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따라서 폭력 없는 사회,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 사회,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가 민주사회임을 인식시킨다.
- 7) 민주사회는 다양한 국가 간의 이익관계를 도모하는 전쟁을 반대하며, 지역 인종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비판적 이해²⁶⁾를 가지도록 돕는다.
- 8) 전쟁의 피해자로서 청소년들의 실태, 즉 전쟁고아, 소년병의 현실을 밝히고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정치교육 교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과정에서 정치교육 교과서로 사용한다. 민주시민의 3대 기초소양, 즉 개인의 권리, 공동적 삶의 형식으로서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 간 평화 지향성을 가르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이론의 근간은 국가의 자치능력으로서의 법치 사상, 그리고 보편적 인간의 평등, 자유, 정의, 그리고 생명을 지켜내는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사상을 전제한다고 볼 때, 권력의 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지배 양식이면서 동시에 삶의 형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교재는 다양한 부정적 예증들(왕정, 일당독재, 갈등과 폭력, 전쟁)을 사례로 제시하고 이러한 왜곡된 힘의 형태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판적 토론 능력, 그리고 참여와 합의, 민주적 실천을 통한 평등사회, 인간다움을 지키는 사회,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독일 사회라는 판단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 7-9학년(중등학교 I 기초소양 과정) 정치교재 분석

초등학교 정치교육 과정이 “삶의 양태로서의 민주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중등학교

26) (그림 출처: *Arbeitsbuch fuer Politische Bildung: Grundschule Berlin und Brandenburg* 5/6, 76)

과정에서는 “사회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재는 청소년과 정치, 미디어, 인권과 법과 재판이라는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 각 단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어떤 민주적 원칙이 사회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 1 주제: 청소년과 정치

- 가족관계에서 시작되는 법적 권리와 의무/ - 학교 교실에서의 공동생활 /- 방법: 쟁의조정
-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규칙들/ - 학생대표제의 과제와 가능성/ - 토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브란덴베르크 관할청에 대하여/ - 극빈아동 - 소수자의 문제일까?/ - 외국인 청소년 : 두 세계를 살아가기/ - 방법: 도표 보며 학습하기/ - 더 큰 짐을 지고 있는 여성/ - 여성정책 토론하기/ - 성성(Sexualität)의 생활양태/ - 우리 도시에 사는 장애인/ - 노년층의 생활양태와 정황/ - 방법: 문의하기/ - 청소년 집단과 연합체(체육, 종교, 문화, 환경, 이익단체)/ - 명예직: 타인을 위한 노력/ - 종합이해

제 2 주제: 대중매체

-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미디어/ - 미디어 민주주의 - 정치 통로로서의 미디어/ - 일간신문



27) Christian M. Ernst, hrsg., *Arbeitsbuch fuer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Brandenburg* (Berlin: Conelsen, 2008).

- 미디어는 어떻게 우리에게 정보를 주나?/ - 토론: 여가와 미디어 -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 - 현실- 시각(Blickwinkels)에 대한 문제/ - 토론: 미디어에 비친 가족/ - 방법: 논쟁
- 전 지구적 전파망/ - 위험 지역으로서 인터넷/ - 방법: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에 대한 논의
- 종합이해

제 3 주제: 인권, 법과 재판

- 인권의 성립 과정/ - 사형과 인권/ - 독일 헌법의 기초로서 인권/ - 여성과 인권: 올림프 드 구주(Olympe de Gauges)²⁸⁾ 케이스/ - 여성의 권리는 인권문제/ - 아동권은 인권문제/ - 방법: 공개 인터뷰/
- 국제 사회의 인권 정책/ - 인권 기관과 그 과제/ - 방법: 관할청에 편지쓰기/ - 인권과 망명법/ - 인권의 위기와 인권침해/ - 방법: 찬반 토론/ - 세계 경제와 인권 문제/ - 그도 인권이 있다!/ - 독일연방은 하나의 법치국가/ - 권력 분립 - 권력집중 방지/ - 방법: 법조항 살펴보기/ - 더 많은 통찰 - 더 많은 법/ - 공공의 세계에서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범죄 - 공정하게 살펴보기/ - 징벌 - 그 의미와 목적/ - 청소년 법정/- 우리가 원한 것은 진정 아니었다.
- 프로젝트: 텔레비전 법정 쇼 살펴보기/ - 종합토론

이상과 같은 목차들을 중심으로 인문계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인문계 중학생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이해시키고, 정치적 관심의 중요한 과제로서 사회 내 약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육한다. 극빈 아동, 이주 외국인 청소년, 여성의 권리, 장애인 및 노년층의 삶과 그들의 정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2) 이 과정에서는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드는 대중 매체의 정치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시키고, 매체를 통한 정치의 양상을 이해하고,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분석능력을 가지도록 돕는다.

3) 이 교재는 민주사회란 법치를 통하여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그리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망명한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범죄는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징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3) 10-11학년(고등학교) 정치교재 분석

브란덴베르크 지역 고등학교 정치교육을 위한 교재는 총 여섯 가지 기본 주제를 담고 있다. 그것은 법과 재판/ 사회구조/ 독일연방 민주주의/ 경제와 환경세계/ 유럽공동체/ 국제정치이다.²⁹⁾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에서는 삶의 양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공동체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주안점이었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종의 통치형태로서의 민주주의(Demokratie als Herrschaftsform)가 총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각 주제에 대한 교육 목차들은 다음과 같다.

제 1 주제: 법과 재판

- 법과 정의/ - 법의 과제/ - 방법: 법조항 살펴보기/ - 공법과 사법/ - 나이에 따른 법적 장치/

28) Olympe de Gauges(1747~1793)는 프랑스 혁명 당시 여성 참정권 및 인권 운동가.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the Female Citizen(1791) 저술.

29) Karl-Heinz Holstein, hrsg., *Brandenburg 9/10 Politische Bildung* (Berlin: Cornelsen, 2006).

- 형법/ - 법을 지키는 법정/ - 방법: 재판방청/ - 프로젝트: 텔레비전 재판극/ - 청소년 재판권/
 - 청소년 재판 지원/ - 범법자와 희생자의 균형/ - 막다른 자리 (Ab ins Heim)/ - 청소년 형벌의
 마지막 자리/ - 사례 연구: Arno S. 의 케이스/ - 사례연구: 청소년 법정에 선 Arno S./ - 남은
 과제/ - 수형연령(Strafmuendigkeit)

제 2 주제: 사회구조

- 사회계층/ - 과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 - 양배추 재배지역에서 요양지역으로
 - 브란덴베르크 지역의 변화/ - 가난 - 자기 잘못인가?/ - 사회주의 국가(Sozialstaat)의 과제/ -
 사회보장 제도- 사례: 집세 - 방법: 조사방법/ - 새로운 고향 독일/ - 타문화와의 만남- 법 극단주
 의/ - 법 극단주의에 반한 발의/ - 과제: 시민적 용기의 발전/ - 남은 과제와 요약

제 3 주제: 독일연방의 민주주의

- 인간은 정치적인 존재/ - 민주주의는 우리로부터 시작 한다/ - 우리를 위한 정치란 무엇일까?/
 - 민주주의의 특징/ - 일당 독재: 동독의 사례/ - 헌법/ - 독일은 민주적 연방 국가이다 - 권력 분
 립과 권력 제한/ - 연방헌법재판소/ - 수상과 통치/ - 의회의 과제/ - 선거와 선거 기본법/ - 어
 떻게 피선되는가? - 방법: 선거 공고문 분석/ - 정당과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 공동작업: 정당 정
 책 조사/ - 국민의 결정 -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모델?/ - 시민 창안제 - 정치문화의 중요요소/ -
 과제: 시민창안 경험하기 - 방법: 계획 짜기/ - 남은 과제와 종합

제 4 주제: 경제와 환경세계

- 자유주의 시장경제/ - 사회주의 시장경제/ - 광고- 시장경제의 표어/ - 소비자 보호
 - 과제: 심리 지도를 가지고 종합하기/ - 기업을 위한 공동 결정권/ - 실업의 형태들
 - 실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가? - 방법: 시나리오 요법/ -
 환경보호와 경제/ - 자동차 없는 주거와 삶?/ - 남은 과제와 종합

제 5 주제: 유럽

- 유럽 연합 - 우호적인 공동작업의 모델/ - 유럽 - 통합은 되었으나 통일은 아니다/ - 유럽연합
 은 어떻게 기능하나?/ - 유로화와 유럽내(內)시장/ - 유럽연합- 하나의 사회주의적으로 통일된 유
 럽?/ - 유럽 의회는 얼마나 큰가?/ - 우리의 이웃나라 폴란드/ - 폴란드인과의 만남/ - 종합이해

제 6 주제: 국제정치

- 평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 과제로서의 세계 평화 - 유엔/ -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기구: 나토와
 유럽 안전과 협력기구(OSZE)/ - 유고슬라비아의 사례/ - 코소보 분쟁/ - 발칸지역의 난제로서의
 평화 - 방법: 미디어에 나타난 사진 분석/ - 국제공동사회의 위협인 테러/ - 연방 방위군 - 역사로
 부터 배운다/ - 독일 사병들이 세계전역으로?/ - 연방 방위군의 미래 - 방법: 설문조사/ - 개발도
 상국이란 무엇인가?/ - 세계경제 - 모든 나라를 위하여 동일한 조건들? - 개발지원의 양태들/ -
 공정한 거래 - 커피 사례/ - 공동 작업: 모든 바나나/ - 아시아의 호랑이 “남한” - 하나의 모델일
 까?/ - 세계 기후와 정책/ - 남반구 개발금지?/ - 지속적인 발전 - 방법: 단상토론/ - 계속 과제
 와 종합 이해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 일상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
 정하고 평화적인 가치를 찾아나가며, 가정과 이웃과 다양한 사회 구조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 이 과정에 담겨있다. 독일의 집나지
 업 상급반에서 사용되는 이 교과서는 총 6단원의 교과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사회의 외면적인 질서로서 법과 재판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법체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촉진하고, 공법과 사법, 형법과 청소년 법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한다.

2) 사회의 구조적 이해를 위하여 사회계층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사회주의적 국가의 장점을 사회보장제도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배려의 과제를 이해시킨다.

3) 독일 연방제의 구조적 특성과 정당정치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집 과정과, 정권분립을 통하여 권력을 배분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개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체적 시민교육을 도모한다.

4) 자유/사회주의 사회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산물인 실업 현실과 환경파괴 현실을 제시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생각을 나누는 훈련을 도모한다.

5) 독일연방의 유럽연합 내에서의 협력과 공동의 과제들을 이해시키고 이웃 나라에 대한 사례적 경험을 나누도록 돕는다.

6) 독일사회와 국제사회간의 연대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향한 노력들을 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현대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분쟁들에 대한 평화적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활동의 특성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환경 세계 파괴현실을 극복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공동적으로 모색하는 과제를 이해시킨다.

7. 단계별 교육구조와 이해지평

이상과 같이 주어진 자료의 한계 안에서 목차와 교육 목적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부터 지나 지엄 상급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교육(사회교육, 시민교육) 내용이 가르쳐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이 우리 한국 사회교육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독일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과정과 분단의 경험을 가졌던 사회가 통일을 이룬 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사회교육의 과제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민족국가 의 틀을 벗어나,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구조를 벗어나, 독일 사회가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교육의 지평은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이다. 아래 표 # 1 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인 평화교육을 거쳐, 독일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시민(cosmopolitan)인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 # 1 학년 단계별 정치교육 구조

학년별 내용	제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이해지평
3- 4학년	민주주의 아동의 권리이해 평화 보장 노력			평화 사회 속에서 살 아가는 아 동
7-9 학년		청소년과 정치		독일 사회

		미디어 인권과 법, 재판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
10-11학년			법과 재판 사회구조 독일연방민주주의 경제와 환경세계 유럽 국제정치	국제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독일시민

이 교재들이 담고 있는 내면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독일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은 단계별 학습자로 하여금 민주주의, 인간의 권리, 법제도와 재판, 사회 내 약자의 권리보호, 환경세계에 대한 책임, 이웃나라와 저개발 국가에 대한 관심, 세계 평화의 과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뒤진 이들에 대한 인간애적 관심, 평화를 위한 민주적 절차와 국제정책 및 협력 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이런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나(우리)와 가정, 학급(학교) 공동체, 나(우리)와 우리 사회, 나(우리)와 독일연방, 나(우리)와 유럽연합, 그리고 나(우리)와 국제사회, 나(우리)와 환경세계 라는 사유지평 혹은 패러다임의 확대과정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3단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인 의식과 사유방식을 키울 뿐 아니라 가정, 학급, 사회, 국가, 국제사회에서 창의적이며 책임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학습내용 중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기본 틀인 법치국가(Rechtsstaat)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하여 법과 그 의미, 법의 과제, 역할 등에 관하여 전체 과정의 약 30%를 반복 교육하도록 할애하고 있는 점 또한 매우 독특하다.

민주와 법치를 강조하는 이런 관점은 전근대적 황제숭배와 신민의 의무라든지, 혹은 국가사회주의적 오만이라든지, 이데올로기적 일당 정치나 아리안 순혈주의나 단일민족론과 같은 허구적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는 단일한 사고나 일방적인 사유형태에 빠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와 가치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있어야 할 공정함과 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약자에 대한 배려의 문화를 형성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향한 미래적 과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의 기초가치, 즉 자유, 평등, 연대, 평화, 생명 가치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승인만이 아니라 예찬의 문화를 형성하여 인종, 피부, 성, 언어, 종교, 나이, 성적 성향을 근거로 삼아 일어나는 차별과 배제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스 쿵이 제안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윤리의 6대 과제 역시 사회교육과 종교교육이 공유하고 있는 지평을 예시하고 있어 깊은 함축성을 가진다.³⁰⁾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피억압, 착취와 피착취라는 대립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기과장의 논리나 미덕으로 억압적 사회질서를 위장하는 교육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여는 교육일 수 없는 것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교과과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온갖 억압과 차별을 이끌어 내던 논리, 즉 국가주의의 우월성을 앞세운 제국주의(imperialism), 식민지주의(colonialism), 허위 인종적 우수성을 내세우는 인종차별주의(racism), 남성우월주의를 조장하는 가부장주의(patriarchy), 배타적 순혈주

30) Hans Kueng은 근대후기적 요청으로서 여섯 가지 사회 윤리적 테제를 제시하였다: not just freedom, but also justice; not just equality, but also plurality; not just brotherhood, but alsosisterhood; not just coexistence, but peace; not just productivity, but solidarity with the environment, not just toleration, but ecumenism. Hans Kueng, *Global Responsibility*, 67-69.

의가 초래한 타인종공포(xenophobia)를 불러오는 편견 교육은 즉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정치교육의 기본적 합의가 아닌가 생각된다.

정치교육은 배타적이며 억압적이거나 지배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시민적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함과 권리를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실천능력을 키우는 데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가진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보다 더 나은 사회, 인간다운 사회, 평화를 이루어 내는 능력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다문화 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남북한 대결구도를 언젠가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가 독일의 정치교육 구조를 참고하면서 보다 새로운 공존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나오는 말: 인간화와 민주화를 통한 공존

오늘날 우리가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이 매우 애매해 지고 있다. 과거에 명시적이었던 것들이 불명료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변종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적 공동체는 근대적 공동체 개념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다르다. 근대 후기 사회 안에서 근대적 사유역시 폐기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가족, 가정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너무나 자명한 것으로 여겨지던 민족과 국가 개념조차 모호해 지고 있다. 바우만의 액체사회라는 개념이 실감이 나는 세상이다.

정권에 따라 국가의 정체성이 새롭게 규정되고 있어 국가에 대한 이해도 상대화 되고 있다. 이념적 대립구조도 예전에 비하여 느슨해 진 것도 사실이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 현상 속에서 사회의 총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려면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대처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보다 바람직하게 성숙시킬 수 있는 사회교육의 새 지평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전근대, 근대, 근대후기라는 시대적 변화, 자유주의/사회주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새 지평에 대한 요구, 순혈주의 단일민족 신화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구성원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진행과정을 모두 감싸 안을 수 있는 보다 새로운 사회교육/정치교육/시민교육의 지평을 찾으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선행 사례들을 살피면서 그들의 오류를 피하고,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우리의 과제들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독일 사회는 유럽의 다른 사회들에 비하여 근대국가 형성과정이 늦었다. 또한 독일은 황제 통치와 국가사회주의의 권위주의적 통치, 그리고 독일의 분단과 일당독재 사회주의를 경험을 한 사회다. 이런 경험에서 얻은 하나의 결론으로서 그들은 민주주의 교육이 과거의 오류를 피하고 국민적 능력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지혜를 터득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 이념적 갈등,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을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그리고 창조적으로 극복해 나갈 능력을 배양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방향을 나는 “**사회의 인간화**” “**국민의 세계 시민화**” 라고 표현하고 싶다.

독일 사회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서구 이웃 사회들과 함께 나누어 온 체험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2005년 파리 시외 13구 이민자 사회에서 일어난 폭동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면 무수하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삶에서 낙오하고, 낙오한 집단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무수한 사회 문제들을 불러오게 된다는 샤틀리증명이었다. 독일 사회 역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이주자들이나 소수인종에게 차별과 배제를 불러오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회의 인간화라는 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 역시 이미 사회 구성원이면서 미래에 보다 중요한 책임을 맡을 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윤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주적 기초가치(demokratische Grundwerte)를 체현할 수

있는 능력은 곧 민주능력이며, 이는 정치 능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어려서부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학습을 하고, 법치의 원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약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사회 공학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은 배타적 민족주의나, 허위 순혈주의라는 집단의 비도덕성을 극복하는 길일 뿐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인간화하며 민주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런 인간화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하여 거의 시민적 문맹(civic illiteracy)³¹⁾이나 야만과 다름없이 태어난 생명들을 바람직한 세계시민/민주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한 작업이 시민교육이라는 과제로 인식되고, 이 교육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체현하는 지평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내가 독일 정치교육 교과서들을 살펴보면서 얻은 하나의 결론이다. 이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차별과 배제를 초래하는 모든 편견 너머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민주적 역량과 그 기반을 다지는 데 있다.

- 끝 -

31) Geory Weissenro, hrsg. *Politikpotenz: Was Unterricht zu leisten hat* (Bonn: bpb(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8), 14. 여기서 저자는 시민적 문맹에서 벗어나 시민적 교양(civic literacy)을 갖추기 위해서 정치적 주제들이나 개념에 대한 보통의 인식 단계, 정치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시민능력, 핵심적인 정치적 개념과 과정을 관계시켜 이해할 수 있는 시민능력, 그리고 정치학적인 사상의 특수한 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차원적 시민능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5회
다문화사회와 상호문화실천 워크숍

토론

01

김 영 교수(인하대)

02

조성민 교수(한국교원대)

03

정종훈 교수(연세대)

04

김근수 소장(해방신학연구소)

공존의 이념과 실천 토론문

김 영 (인하대 명예교수)

1

우리나라 다문화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의 공존온토크에 참가해서 평소에 존경해온 임재해 박충구 두 교수님의 귀한 발표를 듣고, 지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조성민 선배교수님과 많은 일깨움을 받고 있는 정종훈 교수님과 김근수 소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이런 소중한 만남과 학술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준 김영순 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오늘 논의할 ‘공존의 이념과 실천’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신 임재해 교수님(이하 임교수로 줄임)은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이라는 논제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고 인간사회의 공존을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집착과 인간중심의 공동체주의에서 벗어나는 ‘원심력적 탈중심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자연환경의 위기인 ‘인류세’와 과학기술의 위기인 ‘특이점’을 겪고 있는 지금 인간의 뇌와 기계가 결합되어 있는 ‘사이보그 인간’과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지닌 인공지능로봇인 안드로이드 인간이라는 신인류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뿐’인 세계에서 지구촌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서로 대등한 ‘우리’라는 세계관적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스트휴먼 시대로 접어들수록 진정한 인간성 회복과 인도주의, 즉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 작용하면서 함께 성숙하는 ‘인문학적 사회학적 상생(?)’이 필요하다. 인간사회의 민주주의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적 민주주의, 전자인간의 인격권(?)을 인정하며 인간과 전자인간이 상생하는 포스트휴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아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인간 속에 내재된 알고리즘을 기계의 알고리즘과 결합하는 기인합일(機人合一)의 꿈(?)으로 나아갈 것이다.

인간은 그동안 장내의 세균과 함께 사는 균인합일(菌人合一), 미생물과도 상호기생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탈중심주의적 가치를 추구해야 인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임선생은 유발 하라리, 로지 브라이도티의 근년의 알고리즘과 포스트휴먼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 미래 인간의 공존방식을 진지하게 탐색하여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다.

3

박충구 교수님(이하 박교수로 줄임)의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는 다문화 사회의 등장 배경을 살핀 뒤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다문화/간문화(inter-culturelle)를 경험한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들의 논의에 도움을 받고자 입론을 하고 있다.

다문화현상은 사회 구성비의 변화를 불러온 출산율저하와 사회의고령화로 인한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이민 이주노동자 증가로 말미암아 발생했다. 독일의 경우도 초기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독일 사회에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분적 차별을 철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동화정책을 폈다.

독일은 1990년 이후 귀화 - 동화 - 다문화를 거쳐 정책의 초점이 통합정책이 적용되었다. 사회정책을 통한 이주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국적법을 개정하여 귀화자에게 독일 국적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 통합정책과 더불어 다차원적인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1)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이주자들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의 일부가 되고, 2) 사회의 중요한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 3) 그리고 인식능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어교육과 더불어 사회규범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과제, 4) 사회적 차원에서는 독일 사회 안에서의 소통과 토착화된 관계들을 촉진하는 것, 5)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이주민을 받아들인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연대의 범주, 국적부여 등이다. 독일의 다문화 정책 4기를 요약하면 무책임 - 동화(교육) - 권리 인정(법치) - 내집단화(통합)의 방향으로 그 중심이 옮겨왔다.

독일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 인정의 정치를 넘어서 약자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사회를 지향했다.

독일은 이러한 통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시민 교육(우리나라의 경우는?)을 실시했다. 중앙 정치교육원과 더불어 각 주 교육원은 나름대로 정치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고, 그 교재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된다. 민주주의 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거기서 다양성과 다문화적 공존의 지평을 열어 나갈 사회적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다양한 가치,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아가는 최대의 공통분모는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민주적 정치역량을 키우는 과제가 중요하다. 사실 이런 이해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여러 단계의 정치 교육적 성장 과정을 거쳐 왔다.

독일 정치교육의 핵심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 정치교육은 사회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나 변화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입장을 제시하고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판단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합의했다. 이 원칙은 주입식 이념 교육의 종말과 더불어 학생들의 자기 및 제도, 미디어, 비판적 정치의식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독일 정치교육은 학생에게 민주적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치적 행위를 강화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두었는데, 이는 민주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점을 찾는 공존의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박교수는 독일의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시민교육/정치교육을 학년별 정치교육의 교과서를 분석해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삼게 해준다.

4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약탈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양극화와 차별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열강들은 자기들의 패권과 헤게모니를 위해서 제국주의의 길을 가면서 만만한 나라를 방패막이 삼아 이용하고 있고, 세계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무능한 지도자는 불안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과 배제를 넘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며, 점차 다문화/간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과 사회정책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

이 '공존온토크'에 참여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다.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임재해교수)에 대한 논평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성민

현재 인류는 비약적인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임교수님의 논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많은 생각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임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인간사회 내의 공존보다 인간과 자연 생태계 그리고 포스트휴먼과의 공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있다. 임교수님의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의 산업화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비상사태가 초래됨으로써 인류는 괴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인간종 즉 사이보그(반인간)와 안드로이드(전자인간)가 출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호모사피엔스의 사회에서 신인류인 호모 데우스(인간신)의 사회로 발전하게 되어 서로 다른 인간종들과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생물학적 인간이 사이보그나 안드로이드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가 생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가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생물학적 인간종을 몰락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나뿐’이라는 자기중심주의 또는 ‘인간뿐’이라는 인간중심주의 가치관을 포기하고 자연과 소통하면서 공존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쩔 수 없이 출현할 수 밖에 없는 신인류와 공존하기 위해 그들을 인간처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만물이 모두 대등한 생명이라는 대동세계를 추구해야 한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인간종인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에게는 인격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동물이 동물권을 가지는 것처럼, 모든 생물도 생명권을 가진다고 인정해야 공생할 수 있다. 태양계를 완결된 생명체로 보는 온생명론에 의하면 무생물에게도 생명권을 인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인간처럼 활동하는 인공생명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모든 존재에 생명권을 인정하고 안드로이드에게도 인격권을 인정하면 지구촌을 구성하는 모든 종의 존재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연의 생명권과 인조인간의 인격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대등하게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다른 버전이다. 자연생명권을 인정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민주주의는 지금 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전자인간의 인격권을 인정하며 인간과 전자인간이 상생하는 포스트휴먼 민주주의는 앞으로 이뤄야 할 긴요한 과제이다. 화이부동의 대동세계 즉 공다체의 세계에서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이보그와 안드로이드 등 인간과 다른 별종의 인간들이 서로 대등한 인간종으로서 공존하며 상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포스트휴먼 민주주의도 이를 수 있다.

임교수님은 인간이 다문화가족이나 다른 인종과 공존한다고 해서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임교수님은 지구촌의 자연생태계와 그리고 신인류와의 공존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인간이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단위 안에서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 언어, 종교, 문화의 공존만이 아니라 지구촌 안에서 서로 다른 종과 인간종의 공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공존과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현존 인간이 가까운 미래에 전개될 수 있는 재앙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류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교수님의 논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임교수님이 암시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소아적인 사고를 버리고 대아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배려하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 괴멸의 위험성은 줄어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아적인 관점에서 소수자인 약자를 배려한다면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도 줄어들고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에 더 생각할 거리를 제시해보려고 한다.

첫째, 인조인간과의 상생을 위해 포스트휴먼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인지, 포스트휴먼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안드로이드는 결국 인간이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든 인간의 구성물인데, 그것이 인간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인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인지,

셋째, 동물 심지어 무생물에게도 생명권이 있다고 보는지, 그들에게 생명권을 부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넷째, 권리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생명체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심을 인간에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임교수님의 논문은 인간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생태주의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안내했다는 점에서 논평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인간중심주의나 자기중심주의에 젖어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평을 보다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좋은 논문을 발표해주신 임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박충구교수)에 대한 논평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성민

박교수님의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다루어야 하는 다문화 현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의 경우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참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박교수님의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는 남성 우월적 문화의 몰락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와 자유가 신장됨과 동시에 출산율 저하와 사회의 고령화가 진전됨으로써 이민자 혹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다문화는 전체를 보면 다수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에서 다문화 현상이지만, 문화와 문화 사이의 관계 간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의미에서 간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와 사회적 환경이 비슷한 독일의 경우를 모범 사례로 제시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이주자 본국으로의 회귀 정책, 독일문화로의 동화 정책, 다문화 인정 정책,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의 과정을 거쳤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 인정의 정치를 넘어 차이를 극복하는 사회통합의 정치를 지향하였다.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민만이 아니라 주류 거민의 의식 변화가 또한 필요하였다. 이슬람의 세력화로 인한 주류 거민들의 거부도 있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치교육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즉 법치와 정의, 헌법과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 보호, 세계 평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시민교육과 아울러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하였다.

독일의 사례가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해외로부터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주민과 국내 주류 거민 간에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 까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주제일 것이다.

문화 간의 갈등이 다른 문화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타문화에 대한 혐오감과 부당한 차별은 근거 없는 편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자문화 우월주의 편견은 타문화에 대한 배척과 차별을 낳게 된다. 그러나 문화는 타문화를 인정하거나 수용하면서 자문화와의 결합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 간의 인정을 넘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통합을 가져온다면 결국 평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말하기는 쉬어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사회통합을 통한 평화의 달성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독일의 교육방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포함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방식에서 주입식이 아닌 “비판적인” 토론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창조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인 방법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고 해서 다문화사회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러한 해결책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의

지를 길러주는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 소수민족과 타문화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즉 “배려적인” 마음을 교육활동을 통해서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인 방법만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길러주기는 어렵다. 여기에 교육의 장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배려적인 탐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소위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 활동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다.(Dewey, Lipman). 탐구공동체 활동은 사회적 불의를 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다. 그것은 정의감과 배려심을 균형 있게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박교수님의 말씀처럼 민주주의는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찾는 공존의 철학”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양성 가운데에서 갈등 요소로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라는 인권의 기본 축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정의 개념도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듯이, 인권을 그 기본 요소로 전제하고 있다. 인권은 강자의 언어가 아니라 “약자의 언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곧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사회 갈등과 분쟁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함으로써 일어나고 그에 따라 약자들의 저항이 발생하면서 평화가 깨진다. 인권을 존중하게 되면 민주주의와 정의가 실현됨으로써 평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존중에서 중요한 태도는 다른 사람 특히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한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교육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교수님이 독일교육의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주관, 공존온토크 [공존의 이념과 실천] (2023.5.11.)

‘다문화사회’에서 민주주의 교육과 ‘공감과 공생과 공명’의 덕목이 절실하다

정종훈 교수(연세대학교)

<박충구 교수>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

독일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과 관련해서 “산업현장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회자(膾炙)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독일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네 단계는 발제 내용대로, 돌려보내는 회귀(귀환)정책, 독일 사회에 적응시키는 동화정책, 법제화를 통해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정책, 독일 시민의 일원으로 내집단화하는 통합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독일 사회는 다문화정책과 통합정책을 위해서 연방 차원과 주 정부 차원에서 정치(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은 인간화와 민주화, 세계시민과 민주시민, 편견과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평화로운 공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점증하는 우리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은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정착과 실행을 위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논찬자는 독일개신교 협의회의 ‘민주주의 사회백서’가 민주주의를 통전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기본가치’와 ‘지배형식’, ‘삶의 형식’과 ‘행동 덕목’의 네 차원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유란 어떤 사람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외부 침략 앞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국가는 외부 침략의 위험을 구실로 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부자유의 원인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평등은 무엇보다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며, 사회적 지위와 출신성분, 나이와 성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의 상황개선과 재화의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박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자유롭게 승인하고, 그것들의 침해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애는 사회경제적인 약자들과의 연대성 안에 존재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국가(Sozialstaat) 안에 존재하며, 이를 위한 정치와 공공적인 삶의 참여 가운데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공동으로 실현할 때만 고유한 의미에 접근할 수 있다. 평등과 박애 없는 자유는 자의(恣意)가 될 것이고, 자유와 박애 없는 평등은 획일화가 될 것이며, 자유와 평등 없는 박애는 맹목적인 자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들은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틀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틀은 권력체제를 통해서 창출하게 되는데, 이 틀을 민주주의의 지배형식이라고 말한다. 복수정당, 권력분립, 선거, 시한부 지배, 대의 원리, 다수결 원리 등이 그것이다. 정당들은 지배권력을 쟁취하고자 서로 경쟁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견을 수렴하며 지배를 준비한다.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분할하고 완화함으로써 지배의 횡포를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선거는 지배의 담보자 또는 지배정당을 선택하는 수단이

고, 시한부 지배는 지배자의 독점과 타락을 방지한다. 대의 원리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지만, 모든 권력의 근거는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다수결 원리는 지배를 관철시키고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승인을 유도한다. 민주주의의 지배형식은 지배의 쟁취와 유지를 위한 과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지배형식은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통제하고, 비판하고, 교체할 자유를 가지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정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완전한 지배형식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설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용 과정을 상실하면, 민주적 지배형식은 공허해지고 지배와 복종의 관계만 남게 된다. 자유, 평등, 박애의 축제는 사라지고, 민주주의의 얼굴을 한 독재 또는 관료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수용과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한편으로 시민들은 보다 나은 지배형식을 도전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실행할 수 있다. 한계선 상에 있는 인간의 손으로 완전한 지배형식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보다 나은' 지배형식을 향한 시민들의 노력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열 수 있다. 지배형식로서의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수용하고 훈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전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삶의 형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지배형식과 삶의 형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덕목이 필요하다. 상호인정, 관용, 신뢰, 타협, 갈등의 유지능력과 공존의 지향, 교정과 개선의 능력, 참여와 비판적 거리 유지, 미래에로의 개방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그들은 삶 가운데서 서로의 차이를 관용으로 상호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타협을 모색한다. 이리될 때 다양성은 풍요로움을 의미하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은 새로운 통찰의 기회가 되며, 차이로 인한 갈등은 공존과 공생의 자리로 오게 된다. 개방된 미래는 기존의 것들에 대한 교정과 개선의 능력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 참여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 기존 민주주의에 대한 발전과 도전의 양면성을 지켜낸다. 이러한 덕목들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행동 덕목**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는 기본가치, 지배형식, 삶의 형식, 행동덕목의 복합적인 규정 속에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복합적인 규정은 서로 분리하기보다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동시적으로 작동할 때 보다 나은 민주주의에 접근할 수 있다. 만일 민주주의가 기본가치만 존재한다면, 환상 내지는 이데올로기로 전락할 것이다. 지배형식만 존재한다면, 은폐된 독재나 관료제로 전락할 것이다. 삶의 형식만 존재한다면, 무정부주의로 전락할 것이다. 행동덕목만 존재한다면, 사회구조적인 면을 외면한 개인윤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지배형식과 삶의 형식에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지배형식은 기본가치와 삶의 형식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삶의 형식은 기본가치와 지배형식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또한 행동 덕목은 기본가치와 지배형식과 삶의 형식을 올바르게 조정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리될 때 민주주의는 생동감을 갖고, 우리가 속한 국가나 공동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희망찬 미래를 이끌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탈북민 등의 증대로 인해서 다문화사회로 급진전하는 우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시민)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는 정치(시민)교육 또는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사회의 인간화'와 '국민의 세계 시민화'를 달성하고, 공감과 공생과 공명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공존의 생태학적 인식과 인간종 다양성 시대의 소통 구상(임재해)

임재해 교수님은 지구 환경이 인류세, 즉 인류 종말세에 진입했다고 전제한다. 인간이 자초한 인간종의 위기. 즉 인류세가 자연환경 위기라면,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비약적으로 능가하는 특이점에 이르면, 포스트휴먼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설명한다. 포스트휴먼 시대에 인간은 더 무력해지고 소외되어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류사회의 공존과 지속을 위해서도 인류는 자연생명과 공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포스트휴먼 시대로 갈수록 진정한 인간성 회복과 인도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재해 교수님의 탁월한 분석과 논지에 나는 거의 일치하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인간과 다른 종의 소통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월의 계기”라고 말씀하신 임교수님은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전제하셨을까. “포스트휴먼에게는 죽음이라는 운명도 사라질 것”(이종관) 의견은 몹시 당황스럽다. 인간은 죽음 문제를 해결했으며, 죽음은 더 이상 인간과 관계없다는 말인가. “앞으로 “인류가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유발 하라리) 의견은 창조주 신을 모욕했다기보다 인간 자신을 과장하고 모욕하는 의미로 먼저 다가온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자 판단 오류”라는 임재해 교수님 의견을 경청하고 찬동하면서도,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만물을 책임있게 돌본다는 성서의 생각을 나는 잊지 않는다.

“생산 자동화로 증대된 수익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문제가 없다” 말씀과 “안드로이드도 인간처럼 재산권을 행사하고...” 문장은 잘 어울리는지 여쭙고 싶다. “누구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생물학적 인간이 사이보그나 안드로이드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더 현실적”이라는 임재해 교수님 말씀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들리진 않는다. 인류가 닥친 문제를 결국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임재해 교수님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신 듯하다. 임재해 교수님 말씀이 맞고, 내 추측이 틀리길 바란다. “우리가 돌과 꽃, 그리고 비가 뭐라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문장에 나는 덧붙이고 싶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민속학자와 과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진지하게 염려하는 모습에, 종교 단체의 생존과 종교인의 생계를 먼저 걱정하는 종교계에서 오래 호흡해온 나는,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부끄러웠다. 국보급 민속학자 임재해 교수님의 글을 나는 이번엔야 처음 읽어서, 너무 죄송하다.

토론문(해방신학연구소장 김근수) 2023. 5.11

“편견과 차별의 제거: 공존의 과제”(박충구)

“주어진 사회는 인종차별 사회”라는 프란치 파농 명언이 박충구 교수님 글의 배경이다.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이 다문화 사회를 불러들였고, 이민 혹은 이주 노동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다. 비교적 단순한 인종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간문화적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의미있을 것이라고 교수님은 전망한다.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의 유입뿐 아니라 동서 이념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범 사례로 연구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주민들 수가 전체 인구의 8% 정도를 넘길 무렵 독일 사회는 적극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주류 거민들을 교육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가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문화 인정의 정치를 넘어서 약자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정치까지 적용하는 사회를 지향했다. 다문화적 공존의 과제는 공동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책임 문제로 이어진다고 박충구 교수님은 강조한다. 결국 민주주의 교육이 정답이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가진 시민 의식에서만 다양성과 다문화적 공존의 지평을 열어 나갈 사회적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독일 정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루어지는 자리는 초등학교다. 초등학교 학생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시작된다. 주입식 이념 교육을 거절하고, 교사의 가치가 주입된 교육을 배제하며, 합리적 토론을 익히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며, 자기 자신 및 제도, 미디어, 이념 비판적 정치의식을 학생들은 키워나가고 있다.

다문화 정황에 대한 정치교육이 “민주주의” 시민 교육으로 수렴되고 있는 독일이 부럽기만 하다. 이주민만이 아니라 주류거민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독일인의 생각을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 시민의 정치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시민언론 더탐사는 시민학당을 열어 민주시민 교육을 소박하게 시작하였다. 독일의 초등학교 3/4학년 정치교과서를 한국의 절교회성당에서 가르치면

어떨까. 종교고 성서고 나발이고, 우선 민주시민 교육이 우선 아닐까. 종교와 민주주의를 모순이요 상극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주 많다.

독일에서 8년 살았던 나는 독일의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너무나 부럽다. 내전과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 내전은 없었지만 분단당한 독일, 내전을 겪었지만 분단되지 않은 엘살바도르, 세 나라에서 나는 살았다. 분단과 내전은 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배경 음악이자 주제다. 공존의 과제는 국보급 윤리신학자 박충구 교수님 뿐만 아니라 내게도 평생 십자가처럼 느껴진다.